

[정책 제안] 국가 회복력 강화를 위한 분산형 생존 인프라 구축 방안

다중위기 시대, 국가 안보의 새로운 하부구조 '살림셀' 제안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

[진단] 머니로직(Money Logic)의 한계와 다중위기

- 구조적 파국:** 지배, 성장, 경쟁을 동력으로 하는 머니로직은 기후위기, 양극화, 기술 실업이라는 다중 위기(Polycrisis)에 봉착함.
- 구조적 과부하:** 기후위기와 기술변동성으로 인해 중앙집중식 국가 시스템의 용량이 초과되고 있음. 단일 엔진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복합 위기 상황이므로, 부하를 분산할 새로운 하부구조가 필요함.

[해법] 생존의 최소 실행 단위: '살림셀(Salim Cell)'

- 정의:** 에너지·식량·돌봄의 필수 조건을 자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밑바닥에서부터 강화하는 분산형 생존 인프라의 표준 단위
- 3대 요소 (The 3 Basics):**
 - Zero Basic (자립):** 에너지·식량·물의 자급자족 및 자원 순환 (생존 비용 최소화).
 - Urban Basic (연결):** AI·원격의료·디지털 교육으로 도시 수준의 편의 향유 (공간 제약 극복).
 - Culture Basic (의미):** 돌봄·문화·윤리를 통해 고립되지 않는 공동체 회복 (관계의 풍요).

[메커니즘] 새로운 기회 창출: '살림자본주의'와 성숙(Maturity)

- 가치의 자산화:** 보이지 않던 탄소 감축과 돌봄 노동을 데이터로 정량화 하여 새로운 부(Wealth)의 원천으로 전환.
 - MCI (Eco):** 생활 속 탄소 감축을 측정하여 '조각탄소크레딧(MCC)'으로 자산화.
 - 살림바 (Ethical):** 공동체 기여와 돌봄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신뢰 바우처'로 활용.
 - 살림트로피 (Upside):** 축적된 가치를 유동화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 성숙재(Maturity Goods)** 시장을 통해 윤리적 풍요를 실현.

[기대효과] 국가 재정 혁신과 미래 전략 산업 육성

- 재정 효율화:** 사후 재난 복구에 소모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사전 예방 인프라(살림셀) 투자로 전환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 신성장 동력:** 살림셀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생존 모델로서, 대한민국이 기후테크와 문명 표준(ESG)을 주도하는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육성 가능.

[제언]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및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인프라 투자 전환을 촉구한다.

"전환은 비용이 아니다. 파국을 회피하는 가장 저렴한 보험이다."

국가 회복력 강화를 위한

분산형 생존 인프라 구축 방안

다중위기 시대, 국가 안보의 새로운 하부구조 '살림셀' 제안

(A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 for National Resilience)

SDX 재단
SDX FOUNDATION

- 제안: 전하진 (SDX 재단 이사장)
- 버전: v1.0 (Strategic Proposal)
- 날짜: 2026. 1.

이 보고서는 위기의 시대에 국가와 시민이 맺어야 할 새로운 관계를 정의합니다.

목차

EXECUTIVE SUMMARY	5
서론	7
1. 세계적 붕괴의 징후들	7
2. 생존권은 여전히 유효한가?	8
3. 연구 목적과 구성	9
4. SDX재단의 지난 5년: 기후행동 실험의 축적	10
본론	11
제1장. 생존권의 원형과 보호 모델의 진화: 통제에서 관리로	11
1.1 근대 국가의 성립: 안전을 위한 사회계약의 시작	11
1.2 인구 관리와 생존의 최적화: 제도의 고도화	11
1.3 제도의 역설: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발생	12
2장. 생존권의 제도적 진화와 구조적 한계: '국가 보호' 모델의 성찰	12
2.1 위기의 거대화와 구조적 과부하	12
근대 이전까지 개인의 생존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개인의 운이나 종교적 자선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인류는 역사의 진보를 통해 생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Right)'이자 '국가의 핵심 책무(Duty)'로 격상시켜 왔다.	12
2.2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 가지 위기 현상	13
2.3 권리를 넘어 역량으로: 생존주권(Survival Sovereignty)의 재정의	14
3장. 머니로직의 구조적 한계와 다중위기(POLYCRISIS)	14
3.1 선형적 추출 경제와 소비력 감소;	15
3.2 기술 위협: 노동의 대체와 디지털 죽음정치	16
3.3 머니로직의 모순: 소비력 회복의 구조적 한계	17

3.4 한국 사회의 머니로직 한계: 데이터로 본 현실	18
4장. 다중위기 시대, 생존권의 공백과 새로운 대안	19
4.1 생존권의 위기	19
4.2 자원 고갈과 기술 통제의 역설	20
4.3 생존의 최소 실행 단위: 분산형 생존 인프라 단위	21
5장. 살림셀의 철학과 구조	22
5.1 살림(Salim)이란 무엇인가?: 생존을 넘어 살림으로	22
5.2 살림셀의 3대 핵심 구조	23
5.3 기술적 실현 가능성:	24
5.4 글로벌 생존 모델과의 비교: 살림셀의 독창성과 확장성	26
6장 살림자본주의와 가치 혁명	28
6.1 가치 창출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살림'의 자산화	28
6.2 살림자본주의로의 경제 전환	30
6.3 성장에서 성숙(Maturity)으로: 윤리적 풍요의 시장 메커니즘	32
6.4 현재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대안들	33
7장. 다중위기를 돌파하는 살림셀의 4대 구조적 해법	35
7.1 [개요] 다중위기의 분해와 4대 해법	35
7.2 [에너지] 분산발전과 AI 산업의 공존 메커니즘	36
7.3 [노동] '생계(Job)'에서 '소명(Deep Job)'으로	37
7.4 [기술] 인간 존엄을 위한 기술 통제	38
7.5 [인구] 인구 소멸 해법	39
8장. 미래를 여는 열쇠: 살림셀을 리드하는 인재상	40
8.1 청지기(steward)로서의 인간: 소유자에서 관리자로	41
8.2 살림셀 리더십의 핵심 역량: SERA	41
8.3 실천적 청지기 양성: 살림 미래 리더십 아카데미(SERA)	42
전하진	3

9장. 살림셀의 단계적 추진과 제도적 정착	43
9.1 살림셀의 단계적 확산 로드맵	44
9.2 가치 기록과 외부 연결 메커니즘	45
9.3 ESGG 인증과 거버넌스 연계	47
9.4 제도적 확장과 공공 역할의 재정의	48
9.5 살림셀 법제화를 위한 5대 입법 과제	49
10장. 전환 이후의 효과와 잠재적 한계	51
10.1 전환 이후의 기대 효과	51
10.2 구조적 우려와 대응 과제	52
10.3 만약 살림셀이 실패한다면: 대안 없는 미래의 비용	53
11장. SDX재단의 핵심 사업 3축과 실행 구조	54
결론: 생존주권을 통한 새로운 사회계약	57



Executive Summary

인류는 지금 기후위기, 기술 전환, 구조적 양극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다중위기(Polycrisis)**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개별 정책이나 단일 기술로 관리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조직해 온 기존 사회·경제 구조가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는 오랫동안 국가와 시장에 의해 운영되어 온 생존권 보장 방식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근대 이후 생존은 헌법과 제도를 통해 권리로 선언되었고,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한계, 자동화와 인공지능에 따른 노동-생존 연결 구조의 변화, 글로벌 불평등의 심화는 국가 시스템에 **구조적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단일한 중앙 엔진만으로는 복합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국가의 짐을 덜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제안한다.

1) 전략의 핵심: 역할 분담 (Backbone & Last Mile)

- **국가(Backbone):** 국방, 외교, 거대 인프라 등 거시적 안정성에 집중한다.
- **지역(Last Mile):** 행정력이 미치지 힘든 생활 현장에서 에너지와 돌봄을 자급하여 미시적 회복력을 담당한다.

2) 핵심 개념 정의

- **생존주권:** 국가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 스스로 재난으로부터 생존을 경영할 수 있도록 부여된 능동적 권한이자 역량이다.
- **살림셀(Salim Cell):** 에너지·식량·돌봄의 필수 조건을 자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분산형 생존 인프라의 표준 단위]**이다.
- **살림(Salim):** 소모적 경쟁을 줄이고(Saving), 공동체의 자원 순환과 돌봄을 통해 사회 전체를 되살리는(Reviving) 지속가능한 생명 경영 방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보고서는 기존의 생존권 개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생존주권(Survival Sovereignty)**이라는 전환 개념을 제시한다. **생존주권이란, 외부 시스템이 흔들리더라도 삶이 한번에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존 능력을 스스로 갖는 권리다.** 이것은 생활의 안정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반이 된다. 개인과 공동체가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현장에서 분산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접근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생존주권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최소 실행 단위로서 **살림셀(Salim Cell)**을 제안한다. 살림셀은 에너지, 식량, 물, 돌봄, 관계 등 생존의 기본 조건을 공동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자율적으로 확보하는 **분산형 생존 인프라 단위**로서, 국가·시장·기술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대응의 하부구조로 기능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분산형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평시에는 상호 연결 가능한 생존 네트워크의 기반이 된다.

살림셀의 구조는 **The 3 Basics** 로 정식화 된다. **제로 베이직**은 에너지·식량·물·폐기물의 자립적 순환을 통해 생존의 물리적 최소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어반 베이직**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료·행정·업무 기능을 분산·연결함으로써 공간적 제약을 완화한다. **컬처 베이직**은 돌봄·학습·문화·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형성한다.

살림셀 내부에서 발생하는 돌봄과 기여, 협력의 가치는 **살림바(Salim Bar)**를 통해 기록되며, 이는 화폐적 교환이 아닌 관계와 책임의 축적을 가시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기록은 **살림트로피(Salim Trophy)**와 **ESGG(Ethical Sustainable Global Good)**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책, 투자, 후원, 국제 협력의 언어로 연계될 수 있다.

나아가 살림셀은 생존의 하방 지지선(Downside)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성숙재(Maturity Goods)**' 시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상방 가능성(Upside)**을 제시한다. 구성원들이 생존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달란트로 창출한 지혜, 문화, 돌봄 서비스는 비경합적 가치인 성숙재가 되어 '**살림망**'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이는 기존 자본주의의 시장 메커니즘을 그대로 활용하되, 경쟁과 독점이 아닌 기여와 공유를 통해 부유해지는 '**윤리적 풍요**'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작동시킨다.

본 보고서는 또한 살림셀이 가져올 기대 효과와 함께 구조적 우려 역시 검토한다. 살림셀은 국가의 위기 대응 부담을 분산시키고 시스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공동체의 폐쇄성, 지역 간 격차, 성과의 형식화와 같은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따라서 살림셀은 국가 책임을 대체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보완하는 분산형 생존 인프라로 설계·관리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본 보고서는 다중위기 시대의 생존 문제가 더 이상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실제로 떠받치는 단위를 어떻게 조직하고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살림셀은 이러한 전환을 실행 가능하게 하는 핵심 단위이며, 2026 년은 기존 대응 방식의 미세 조정을 넘어 구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분기점이다.

서론

1 세계적 붕괴의 징후들

지배, 성장, 경쟁을 동력으로 삼아온 머니로직(Money Logic)은 지난 세기 인류에게 번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최근 들어서 명백한 '**작동 불능**'상태로 진입했다. 이것은 1972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¹에서 예측한 시점과 일치한다. 기후위기, 양극화, 기술위협 등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증폭되면서 개인의 빈곤을 넘어, 일부 국가 기능이 한계에 봉착하고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째, 생존 비용의 임계점 초과와 '생존 폭동'의 확산이다. 머니로직은 "시장이 가격을 조절한다"고 믿었으나, 기후위기와 공급망 붕괴는 시장의 조절 능력을 무력화시켰다. 기후 위험 지역에서 보험사들이 철수하며 돈으로도 안전을 살 수 없는 '**기후 파산**'이 현실화되었고, 2025년 한 해에만 전 세계 18개국에서 생필품 가격 폭등과 에너지 부족에 항의하는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개국의 정권이 붕괴하거나 교체되었다. 2026년 초, 이란을 시작으로 이러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생존형 붕괴**'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둘째, 강대국들의 동시다발적 각자도생과 국제 공조의 종언이다. 세계를 지탱하던 주요 축들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미국**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 **중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내부 통제와 배타적 팽창에 몰두하고, 여기에 **러시아**와 **유럽**은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 대신 생존 본능만을 앞세우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거대 권력들이 기후위기라는 행성적 과제를 외면한 채 '**자국 우선주의**'라는 머니로직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약소국과 개인의 생존주권은 보호받을 곳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셋째,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압축적인 성장을 이뤘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적인 붕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수출이 늘고 GDP가 성장해도 내수는 얼어붙고, 자영업 폐업은 속출하는 '**성장과 분배의 완전한 단절**'이 고착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하락과 고립·은둔 청년의 증가는, 청년 세대가 본능적으로 "이 시스템(머니로직) 안에서는 생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사회적 파업**'이다.

¹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1972년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이 MIT 연구진에 의뢰하여 발표한 보고서. 컴퓨터 시뮬레이션(World3 모델)을 통해 인구 증가, 산업화, 식량 생산,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 5가지 핵심 변수가 당시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100년 이내(21세기 중반 경)에 지구가 성장의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여 인구와 산업 시스템의 급격한 붕괴(Collapse)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물질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기념비적 연구다.

지금 우리는 일시적인 불황이 아닌 문명적 전환기에 서 있다. 과거의 성장 방식(머니로직)만으로는 복합 위기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제는 국가라는 거대한 메인 엔진 옆에, 지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수만 개의 보조 엔진(살림셀)을 장착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추진력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는 해결책이 '기술 혁신'과 '금융 처방'이라는 제한된 선택지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전 세계가 내놓는 해법은 여전히 머니로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AI와 자동화로 효율을 높이면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술 만능주의**'는 인간을 생존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이 국가보다 강력한 권력을 쥐고 개인의 데이터를 착취하는 '**디지털 봉건제**'가 강화되고 있다. 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의 사고와 선택마저 통제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이나 금융 완화 같은 '**머니게임**'은 실물 가치 없는 자산 거품만 키울 뿐,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개인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구가 소비력이 감소하는 한 자본주의도 제대로 작동될 수 없으며, 물리적 생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현재 논의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나 지구 신탁(Earth Trusteeship) 같은 대안들도 의미 있는 시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역시 여전히 자본주의적 성장이나 국가 간 합의라는 기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머니로직의 수정판**'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왜 이 낡은 틀을 깨지 못하는가? 구조적 변화가 이토록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생존의 방식'이 곧 인류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위탁한 생존권은 '성장이 곧 생존'이라는 믿음으로 발전을 해 왔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의식 깊숙이 뿌리내려 새로운 상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눈앞의 현상을 뚫아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생존'을 어떻게 정의하고 권력화해 왔는지 그 기원과 역사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그 오래된 궤적 속에 지금의 막다른 길을 뚫고 나갈 단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생존의 역사를 추적하며 새로운 생존주권의 길을 모색해 보자.

2. 생존권은 여전히 유효한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 생존권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자, 근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당성의 근거였다. 국가란 본래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정치적 장치였으며, 사회계약 이론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주권의 정당화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초반을 통과하고 있는 오늘날, 이 오래된 전제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과연 기존의 생존권 체계는 실제로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는가?

기후위기, 감염병, 에너지, 식량 불안, 글로벌 공급망 붕괴, 그리고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대표되는 기술 문명의 급격한 전환은 생존의 조건 자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 역량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생존은 점점 더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시장 접근성에 의존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생존권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없으면 먹고, 살고,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생존권이 제도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취약해지는 역설을 낳고 있다. 특히 청년, 노인, 비정규 노동자, 지역 소멸 지역의 주민들은 생존의 불안정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 되고 있다.

생존권과 생존주권의 재검토 필요성

생존은 언제나 권력의 문제였다. 고전적 주권은 삶과 죽음을 직접 결정하는 '칼의 권리'를 통해 작동했으며, 근대에 이르러 이러한 권력은 인구 전체의 생명을 관리하는 생명정치로 전환되었다. 이후 생존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시민의 권리로 제도화되었고, 국가는 생존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임받은 주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권 모델은 국가의 재정 능력, 경제 성장, 안정적인 노동 시장이라는 전제가 유지될 때만 작동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기술 전환이 이 전제 자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국가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생존은 다시금 선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장과 알고리즘은 새로운 형태의 통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생존을 더 이상 국가가 독점적으로 보장하는 대상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스스로 구성하고 유지해야 할 주권의 영역**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이것이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생존주권' 개념의 출발점이다.

3. 연구 목적과 구성

본 보고서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 생존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생존과 주권의 관계를 재조명한다.

둘째, 기후위기와 기술문명이 중첩되는 전환기에 기존 생존권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셋째, 그 대안으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최소한의 생존을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본 단위와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생존주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림셀과 ESGG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국가, 시장, 시민이 충돌이 아닌 분업과 협력의 방식으로 생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모색한다. 이는 복지의 확장이나 제도 보완을 넘어, 생존을 둘러싼 주권 구조 자체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도이다

4. SDX재단의 지난 5년: 기후행동 실험의 축적

SDX 재단은 지난 5년간 기후위기를 단일 정책이나 기술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시민, 기술, 지역, 윤리, 금융이 결합된 복합 실험의 장으로 인식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재단은 탄소 감축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작동 방식을 탐색하며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실증적 시도를 축적해 왔다.

첫째,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기존 탄소시장 한계를 보완하고, 일상과 기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시적 감축 성과를 측정, 기록, 연결하는 구조를 실험해 왔다.

둘째, 기업, 지자체, 시민이 참여하는 **리월드포럼(ReWorld Forum)**, **탄소감축평가관리사 교육**, **탄소감축인증센터 운영** 등 다층적 기후행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대응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참여 구조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추진해 왔다.

셋째, 기술 중심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윤리, 거버넌스, 시민 역량을 포함하는 **ESGG** 프레임워크를 제안함으로써 기후행동의 평가 언어를 확장했다.

이러한 지난 5년간의 활동은 기존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드러낸 집단적 학습의 결과였다. 본 보고서는 이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2026년 이후 단편적 대응을 넘어선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 각 계층이 힘을 모아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

본론

제1장. 생존권의 원형과 보호 모델의 진화: 통제에서 관리로

1.1 근대 국가의 성립: 안전을 위한 사회계약의 시작

근대 국가 형성의 기원이 된 정치철학은 "개인의 생존은 누가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에게 자연상태(State of Nature)는 공통의 권위가 부재한 상태이며, 그 결과 인간은 상호 불신과 경쟁 속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놓인다. 이 상태에서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짧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주권의 정당성이 '죽음의 공포'에서 비롯된다는 근대 정치의 출발점이다.

홉스의 사회계약에서 개인은 자기보존을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절대적 주권자(Leviathan)에게 위임한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가 "선하게" 개인을 돌본다는 약속이 아니라, 무질서와 상호살해의 위험을 종결 시킬 독점적 강제력이 제도화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근대 초기 생존의 보장은 생명을 '증진'시키는 적극적 프로그램이라기 보다, 폭력의 난립을 억제하는 '질서'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기보다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무질서를 억제함으로써 '신체적 안전(Security)'을 담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근대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과 국방의 주체'로서 생존권의 1 차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고전적 보호 모델은 오늘날까지도 국가 존재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동하고 있으며, 국가는 물리적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독점적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1.2 인구 관리와 생존의 최적화: 제도의 고도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역할은 단순한 치안 유지를 넘어,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산성을 관리하는 단계로 확장되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분석한 바와 같이, 근대 국가는 통계학, 공중보건, 도시계획 등 행정 기술을 발전시키며 인구 집단(Population)의 생존율을 높이는 '적극적 관리자'로 변모했다.

- **공중보건과 위생:** 상하수도 정비, 예방접종, 전염병 관리를 통해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했다.
- **사회보험과 복지:** 산업 재해나 실업 등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보험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존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개별 국민의 삶을 '**최적화(Optimization)**'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현대 복지 국가의 기틀이 되었다. 즉, 생존은 개인의 운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관리하고 증진해야 할 '정책 목표'로 격상되었다.

1.3 제도의 역설: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발생

그러나 제도가 고도화될수록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관리의 사각지대**'다.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등의 철학적 논의를 현대 행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국가는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집단은 오히려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이주민, 혹은 행정 시스템이 포착하지 못하는 신종 위기 계층은 법적으로는 국민이거나 인간이지만, 실제 행정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는 누락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악의가 아니라 거대 관료제 시스템이 갖는 '**구조적 경직성**'에서 기인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제도의 유연성이 부족하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이 오히려 가장 먼저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는 '**제도적 배제(Institutional Exclusion)**'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중위기 시대에는 이러한 사각지대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2장. 생존권의 제도적 진화와 구조적 한계: '국가 보호' 모델의 성찰

2.1 위기의 거대화와 구조적 과부하

근대 이전까지 개인의 생존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개인의 운이나 종교적 자선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인류는 역사의 진보를 통해 생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Right)**'이자 '**국가의 핵심 책무(Duty)**'로 격상시켜 왔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천명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문명적 성취의 정점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역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가 사회보장과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진화 덕분에 현대 국가는 치안 유지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공공의료,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적극적 보장자**'로서 기능해 왔다.

이는 분명 부인할 수 없는 국가 시스템의 성과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경험한 팬데믹과 기후위기,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기존의 국가 중심 보호 시스템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위기의 양상이 국경을 넘나들며 복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개별 국가의 행정력과 재정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팬데믹 상황은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조차, 필수 의료 자원의 배분 문제나 백신 접근성의 격차 등 예기치 못한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가의 의지와 무관하게, 감염병이나 기후 재난과 같은 거대 위기 상황에서는 행정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사회적 취약 계층이 보호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될 위험이 상존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위기의 규모와 속도가 기존 시스템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불가피성**'에 가깝다. 즉, 생존권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지만, 실제 위기 현장에서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2.2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 가지 위기 현상

우리는 이미 다중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행정 및 시장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의 지체 현상(Lag)이다.

1) **팬데믹과 자원 배분의 딜레마** (보건 위기) 지난 팬데믹 당시, 마스크와 백신 등 필수 생존 자원은 시장의 구매력이나 국가 간 힘의 논리에 의해 배분되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보호가 절실한 취약 계층이 오히려 자원 접근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소외**'가 발생했다. 이는 위기 시 중앙집중형 보급 체계만으로는 말단의 모든 개인을 보호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2) **디지털 전환과 보호의 기술적 장벽** (기술 위기)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자동화 시스템과 AI 기반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선별적 복지 시스템이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데이터로 포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의도치 않은 '**시스템적 배제**'가 일어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 **기후 재난과 지역 회복력의 고갈** (환경 위기)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은 국지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중앙 정부의 예산과 인력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재난 발생 후 복구하는 현재의 사후적 대응은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한다. 이제는 중앙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지역 스스로 재난을 견디고 회복할 수 있는 '기초 회복력(Resilience)'이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되었다.

2.3 권리를 넘어 역량으로: 생존주권(Survival Sovereignty)의 재정의

위와 같은 현실적 진단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존 전략을 요구한다. 국가는 거대한 인프라와 제도를 책임지는 '백본(Backbone)'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혈관이 닿지 않는 신체 말단이 있듯, 거대 행정력이 미세한 삶의 현장까지 닿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살림셀은 이 행정의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채우는 모세혈관이다. 국가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이웃이 먼저 서로를 돌봄으로써, 국가 복지의 효율성과 도달률을 완벽하게 보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 시 국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 생존권(Rights)을 넘어, 개인과 지역 공동체가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스스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역량, 즉 '생존주권(Survival Sovereignty)'의 함양이다. 생존주권이란 외부 시스템이 흔들리더라도 삶이 한 번에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존 능력을 스스로 갖는 권리다. 이것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국가의 역할 중에서 미세한 부분에 대한 민첩하고 회복탄력성 높은 대응을 위한 기본 단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기초적인 에너지, 식량, 돌봄 문제를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살림셀)가 자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는 국방, 외교, 거대 인프라 관리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민의 역할 분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자는 제안이다.

국가가 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라면, 생존주권을 갖춘 살림셀은 위기의 충격을 현장에서 흡수하고 완화하는 튼튼한 '기초 체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중위기 시대, 국가와 시민이 공존하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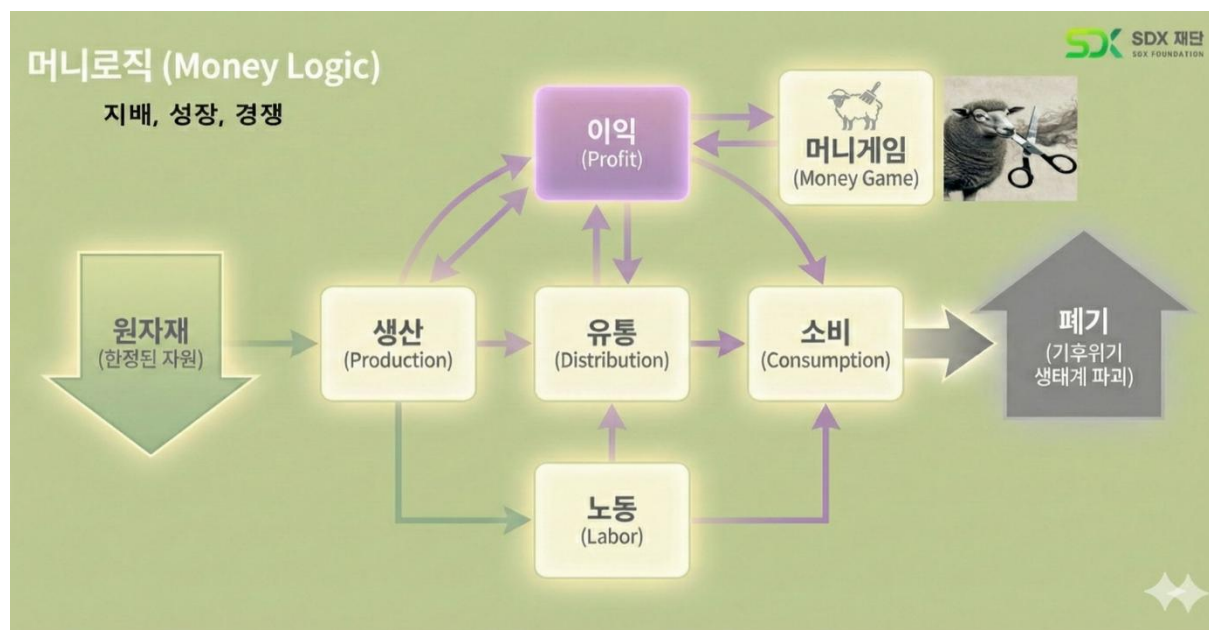
3장. 머니로직의 구조적 한계와 다중위기(Polycrisis)

현대 사회를 지배해 온 머니로직(Money Logic)은 단순한 경제 운영 방식이 아니라, 생존을 조직하는 지배적 문명 논리였다. 개인의 생존은 노동 소득과 시장 접근성을 통해 확보되고, 국가는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생존권을 간접적으로 보장해 왔다. 그러나 이 체계는 내부적 불균형과 외부적 한계를 동시에 노출하며, 오늘날 다중위기(Polycrisis)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3.1 선형적 추출 경제와 소비력 감소;

머니로직의 핵심 구조는 한정된 자원의 투입 →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적 추출 모델이다. 이 구조에서 창출된 가치는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해 순환되기보다, 금융화된 이익과 머니 게임 영역으로 집중되면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첫째, **가치 흐름의 왜곡이 발생한다**.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축적된 부가가치는 실질적 가치를 창출한 노동으로 환류 되지 않고, 자본 이득과 금융 수익으로 흡수된다. 그 결과 노동에 대한 보상은 장기적으로 정체되거나 하락한다.



둘째, **소비력의 구조적 감소가 뒤따른다**. 특히 기술혁신에 의한 급격한 일자리 대체는 대다수 시민의 실질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키며, 머니로직이 전제해 온 무한 성장 모델의 내적 동력을 잠식한다. 소비에 기반한 성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은 구조가 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과정은 양극화의 고착으로 귀결된다**. 부의 집중은 사회적 이동성을 차단하고, 주거, 의료, 식량, 에너지와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권마저 개인의 시장 경쟁력과 구매 능력에 따라 선별되는 위계적 구조를 강화한다. 이때 생존은 더 이상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에게만 허용되는 성과가 된다.

이로 인해 누적된 박탈과 불안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정치적 긴장을 초래한다. 생존의 최소선이 무너진 사회에서 시민들은 제도적 정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분노하고 절망한다. 이는 거리 시위, 폭동, 약탈, 치안 붕괴 등 비제도적 방식으로 분출된다. 이러한 소요는 단순한 일시적 불안정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 비용의 증가와 거버넌스 위기로 이어지고, 국정 운영

의 동력 상실과 시스템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여러 국가에서 식량, 에너지 가격 급등, 실질임금 하락, 공공서비스 붕괴가 겹치며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정부 기능 마비, 비상통치, 심지어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². 이러한 사례들은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불안정의 핵심 원인이 이념 갈등이나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살아갈 수 없게 된 상태' 자체, 즉 생존의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준다.

1) '폐기'의 외부화와 행성적 한계: 기후위기의 구조적 기원 머니로직의 마지막 단계인 '폐기'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Earth System)에 가해지는 누적적 부하를 의미한다.

머니로직은 환경 파괴와 탄소 배출을 비용이 아닌 **외부효과(externality)**로 처리해 왔다. 이로 인해 생태적 부채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었고, 그 결과가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라는 행성적 위기로 가시화된 것이다.

지구의 대기, 해양, 빙하, 생물다양성과 같은 행성적 공유재(Planetary Commons)는 본질적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지배, 성장, 경쟁을 전제로 한 머니로직은 이를 무한히 사유화하고 훼손해 왔다.

3.2 기술 위험: 노동의 대체와 디지털 죽음정치

기술 혁명은 머니로직의 위기를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그 내적 모순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인간을 머니로직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잉여화 한다. 더 많은 부가 창출되고 있음에도, 그 부가 인간의 생존을 지탱하는 방식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1) 노동-생존 연결고리의 구조적 단절 산업자본주의 이래 노동은 생존 자원에 접근하는 핵심 통로였다. 임금 노동은 주거, 의료, 식량 등 기본적 생존 조건을 확보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경로였다. 그러나 AI와 자동화가 대규모로 인간 노동을 대체하면서, 이 노동-생존 연결고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 실업 문제가 아니라, 머니로직이 전제해 온 생존 배분 메커니즘의 한계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기술의 대체 속도는 인간 노동의 재흡수 능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노동을 통해 생존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있다.

² 2025년 네팔, 마다가스카르, 불가리아에서는 생계 위기와 부패, 공공서비스 붕괴에 대한 대중적 소요가 장기화되며 통치 불능 상태로 발전했고, 그 결과 총리 사임(네팔), 내각 해산 및 권력 공백(마다가스카르), 정부 집단 사임(불가리아) 등 실질적인 정권, 정부 붕괴가 발생하였다. 이는 생존 조건의 안정이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2) 인간의 데이터화와 디지털 생명정치 효율성과 최적화를 최상위 가치로 삼는 머니로직 하에서 기술은 인간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관리 가능한 데이터 집합으로 환원한다. 알고리즘은 소득, 건강, 소비, 신용, 행동 이력을 종합해 위험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접근권, 보험, 금융 서비스 등을 차등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생존은 시민권이나 연대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계산한 확률과 효율의 결과가 된다. 보호의 대상은 '필요한 시민'이 아니라, '효율이 남아 있는 데이터 객체'로 선별된다.

3) 디지털 죽음정치의 출현 알고리즘적 통치가 확산되면서, 기술은 삶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죽음을 방지하거나 묵인하는 결정에까지 개입한다. 의료 자원 배분, 재난 대응, 치안 예측 등에서 자동화된 판단은 특정 집단을 구조적으로 후순위로 밀어낸다.

이때 죽음은 명령되지 않는다. 다만 구조적 무관심과 계산된 배제를 통해 '살아남지 못해도 되는 존재'로 분류될 뿐이다. 이는 데이터와 코드, 정책 알고리즘을 통해 작동하는 **디지털 죽음정치** (Digital Necropolitics)의 전형적 형태다.

4) 디지털 주권 상실과 생존 체계의 위기 데이터가 거대 테크기업과 국가에 집중되면서, 개인은 자신의 신원, 건강, 생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다. 개인은 더 이상 생존 조건을 설계하거나 협상하는 주체가 아니라, 알고리즘적 판단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객체로 전락한다.

결국 기술적 실존 위협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머니로직과 결합해 생존을 노동, 효율, 데이터 가치에 종속되는 구조에 있다. 이 지점에서 기술 혁명은 진보의 약속이 아니라, 생존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는 경고가 된다. 질문은 더 이상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기술 이후에도 인간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3.3 머니로직의 모순: 소비력 회복의 구조적 한계

머니로직 체제 내에서도 소비력 고갈을 막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처방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선형적 추출 경제라는 근본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그치거나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1) 재분배 정책과 국가 지출의 한계: 고소득층 증세와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머니게임으로 쏠린 부를 강제로 시장에 유통시켜 소비력을 회복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가치 흐름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교정하지 못한 채 국가 부채를 늘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또한 자본의 해외 유출이나 투자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으며 머니로직의 내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

2) 보편적 기본소득(UBI)의 역설: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 엔진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나 노동과 소득의 완전한 분리는 인간을 생산의 주체에서 단순한 '소비 기계'로 전하진

전략시킬 위험이 크다. 이는 인간이 지구 생태계의 능동적 청지기(Steward)로서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명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3) 기술 진보에 의한 한계비용 제로화의 함정: 기술혁신이 생산 원가를 낮추어 저소득 상태에서도 소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가격 하락은 소비량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으나, 머니로직의 핵심인 '추출과 폐기' 단계를 더욱 가속화한다. 이는 소비력 유지의 대가로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를 앞당기는 자가당착적 결과를 초래한다.

4) 부채 기반 소비의 붕괴: 금융 완화와 신용 확대를 통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인출하여 소비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머니게임 영역만 비대하게 해 결국 양극화를 더욱 고착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론적으로, 머니로직 내부에서 제시되는 처방들은 대부분 '화폐'라는 수단의 조정에 머문다. 재분배나 보조금 확대는 단기적 완충 장치로는 기능할 수 있으나, **생존이 성립되는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지는 못한다**. 생존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한, 소비력 회복을 화폐 투입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직면한다.

앞선 분석이 보여주듯, 머니로직은 내부적으로는 양극화의 고착과 소비력 고갈에, 외부적으로는 기후위기와 기술적 실존 위협에 동시에 노출되며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생존을 시장 가치와 노동 능력에 연계하는 기존 논리는 더 이상 인간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문제는 분배의 규모가 아니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는가**에 있다.

이제 요구되는 것은 부분적 제도 개혁이 아니라, **생존을 조직하는 문명 논리 자체의 전환**이다. 지배, 성장, 경쟁을 축으로 한 머니로직을 넘어, 순환과 공존, 자율을 중시하는 새로운 질서가 요청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치 선언이 아니라, 생존을 시장의 외부로 부분적으로 이행시키고, 인간의 다양한 기여가 화폐 이외의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추상적 비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존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체적 단위**, 그리고 그 단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경제 메커니즘**이 제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의 머니로직에 의한 파국 징후는 다음과 같다.

3.4 한국 사회의 머니로직 한계: 데이터로 본 현실

추상적 비판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머니로직의 구조적 한계는 이미 수치로 가시화되고 있다.

성장의 멈춤 (소비 고갈)

- 실질 소득 감소: 소득 증가 1.2% < 물가 상승 3.6%
- 경제 허리 붕괴: 자영업 폐업률 18% 급증, 청년 체감실업률 22.3%

분배의 실패 (양극화 심화)

- 자산 격차: 상위 10%가 58.3% 점유 vs 하위 40%는 4.7% 불과.
- 지역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GRDP 격차 2.3배 확대.

삶의 불가능 (생존비용 급등)

- 생존 하한선: 서울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월 450만 원.
- 주거의 고통: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 38.2% (UN 권고치 초과)

이 수치들은 머니로직이 더 이상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증명한다.

살림살은 이러한 구조적 파국을 우회하는 대안 경로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과 권력, 시장에 과도하게 포획된 생존권을 어떻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 구조적 대안을 단계적으로 탐색한다.

4장. 다중위기 시대, 생존권의 공백과 새로운 대안

4.1 생존권의 위기

기후위기는 기존의 영토 중심적 국민국가(Nation-State) 주권 모델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탄소 배출, 해수면 상승, 극단적 기상 현상, 생태계 붕괴는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단일 국가의 정책이나 재정 능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행성적(Planetary) 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존권은 더 이상 개별 국가 내부의 사회정책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 조건을 좌우하는 국제적, 초국가적 쟁점으로 전환되었다.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비롯한 국제사법기구와 각국 법원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사안임을 점차 확인하고 있다. 이는 생존권이 더 이상 국가의 재량적 정책 영역에 머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주권적 역량을 가진 행위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조엘 웨인라이트와 제프 만은 『Climate

Leviathan』³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미래 주권 질서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유형화했다.

기후 리바이어던(Climatic Leviathan): 글로벌 엘리트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하향식 기후 통치 체제다. '지구적 비상사태'를 근거로 민주적 절차를 유보하고, 생존을 명분으로 강력한 규율과 감시를 정당화하는 통제 모델이다.

기후 마오(Climatic Mao): 강력한 국가 권력이 시장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 계획에 따라 급진적 탄소 감축을 강제하는 비자본주의적 대응 모델이다.

기후 베헤모스(Climatic Behemoth): 기후위기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며 국경을 요새화하고, 자국민의 생존만을 추구하는 각자도생의 고립주의 모델이다.

기후 X(Climatic X): 기후 정의 운동, 지역 공동체, 시민 네트워크가 연대하여 국가 중심 주권을 넘어서는 대안적 질서를 모색하는 시나리오다. 이는 지배나 강제가 아닌 공생, 돌봄,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누가 생존을 통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로 귀결된다. 즉 생존권을 보장해 왔던 '국가라는 단위'의 역할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떠받칠 수 있는 새로운 권리의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법학 및 과학계에서는 '행성적 공유재(Planetary Commons)'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대기, 해양, 빙하 등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을 특정 국가의 영토 주권 대상이 아닌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국가의 역할을 배타적 지배자(Controller)에서 행성적 자원의 관리자(Trustee)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4.2 자원 고갈과 기술 통제의 역할

기후위기가 생존의 물리적 토대를 흔들고 있다면, 기술 전환은 생존의 사회적, 경제적 토대를 재편하고 있다. 다중위기(Polycrisis) 시대의 생존권 위기는 이 두 가지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발생한다.

1) 물질적 공급망의 불안정: 전력 에너지, 식량, 물, 주거 등 필수 생존 자원의 공급망이 기후 재난과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국가의 재정과 행정 능력만으로는 이러한 복합

³ 조엘 웨인라이트(Joel Wainwright)와 제프 만(Geoff Mann)의 저서 『Climate Leviathan: A Political Theory of Our Planetary Future』(2018)에서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국민국가(Nation-State) 중심의 주권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한다.

위기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 결과 현대의 생존권은 '사전적 보장'에서 재난 발생 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로 축소되고 있다. 이는 생존권이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아니라, 관리와 선별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한다.

2) 디지털 전환의 역설: 알고리즘 통치와 배제 국가의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는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생존 위협을 낳고 있다.

디지털 복지의 사각지대: 복지 수급 자격을 알고리즘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로 포착되지 않는 취약 계층이 시스템에서 배제되거나 감시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구호소(Digital Poorhouse)**' 현상이 우려된다.

의사결정의 자동화와 윤리적 공백: 군사 및 치안 영역에서 도입되는 **자율무기체계(LAWS)**나 자동화된 판단 시스템은 생명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인간에서 알고리즘으로 이양시킨다. 이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생명을 수학적 연산의 대상으로 격하시킬 위험이 있다.

결국 디지털 공간에서의 생존 역시 거대 플랫폼이나 국가의 데이터 독점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 주권을 갖는 '**자기주권신원(SSI)**' 등의 기술적 시도가 등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기술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돕는 도구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4.3 생존의 최소 실행 단위: 분산형 생존 인프라 단위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는 기후라는 행성적 위기와 기술이라는 통제적 위협 사이에서 두 가지 거대한 공백에 직면해 있다.

첫째, 기후 재난 앞에서 거대 국가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경직되어 있어,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어렵다. 둘째,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알고리즘 통치 하에서 개인은 너무 작고 취약하여, 데이터화된 관리 대상이 될 뿐 주체적인 생존을 도모하기 어렵다.

이 공백 지대에서 기존의 사회 안전망은 점점 헐거워지고 있으며, 생존권은 선언적 권리로만 남을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제 질문은 구조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행성적 위기 시대에, 생존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국가 이전의 각자도생으로 회귀하는 것도, 기술 시스템에 생명을 위임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와 개인 사이, 즉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공백을 메우고, 기술을 인간의 편의에 맞게 통제하며, 에너지와 식량 등 필수 조건을 스스로 확보하여 무너진 **생존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생존의 최소 실행 단위**'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생존주권의 실천적 거점을 '살림셀'이라 부르며, 이것이 다중위기 시대에 국가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5장. 살림셀의 철학과 구조

앞선 장에서 확인했듯, 생존권은 더 이상 국가 단위에서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동시에 생존을 시장이나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 역시 인간의 존엄과 실질적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생존주권의 문제는 추상적 권리 선언이 아니라, 생존이 실제로 작동하는 단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전환된다. 본 장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생존주권의 실행 모델인 살림셀과 살림자본주의를 제안한다.



5.1 살림(Salim)이란 무엇인가?: 생존을 넘어 살림으로

살림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간이 되는 '살림(Salim)'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1) 어원적 정의: 한국어의 '살림'은 문법적으로 볼 때 '살리다(to save, to revive)'의 명사형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살림'의 의미는 이러한 사전적 정의나 영어의 'Living(사는 것)', 'Livelihood(생계)'와 같은 단어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훨씬 깊고 심오한 철학을 내포하고 있

다. 우리의 '살림'은 단순히 죽어가는 목숨을 부지하거나 구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집안과 마을, 나아가 생태계 전체를 경영하고, 시들어가는 것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내는 총체적이고 능동적인 '생명 경영(Life Stewardship)'의 지혜다.

살림은 타자의 살림을 통해 우리가 살고,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라는 우리 의식(We-ness)을 내포하고 있다.

2) 한국적 맥락: '경영'과 '돌봄'의 통합 전통적으로 한국인에게 '살림을 산다'는 것은 집안의 한정된 자원을 지혜롭게 배분하여 구성원을 먹이고 입히는 '미시적 경영(Management)'이자, 사람과 자연을 정성으로 보살피는 '돌봄(Care)'의 윤리였다. 쌀뜨물을 거름으로 쓰고 낡은 옷을 기워 입듯, 살림은 버려지는 하찮은 것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생명을 지속시키는 '순환의 미학'을 내포한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에코로직(Eco-Logic)의 원형이자, 다중위기 시대를 돌파할 가장 현실적인 생존 지혜다.

3) 살림의 재정의: 관계적 생존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살림'은 다음과 같다.

"살림(Salim)이란, 기후 재난과 기술 통제로 위협받는 생존의 조건들을 방치하지 않고,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 생태계를 주체적으로 돌보고 회복시킴으로써(Reviving), 지속 가능한 풍요(Thriving)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문명 실천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살림셀'은 바로 이러한 살림의 철학이 물리적 공간과 시스템으로 구현된 '생명 경영의 최소 단위' 즉 분산형 생존 인프라 단위를 의미한다.

5.2 살림셀의 3대 핵심 구조

앞서 정의한 '살림'의 철학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담론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공간(Space)**과 **시스템(System)**이 필요하다. 살림셀은 국가 시스템의 붕괴나 거대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가 앞서 말한 '살림'의 행위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분산형 생존 인프라 단위**'다

살림셀을 구성하는 3대 요소 (The 3 Basics)

살림셀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포함된 마을, 산업단지, 대학, 군부대 또는 법인 등에 모두 살림셀의 단위로 포함될 수 있다.

제로 베이직 (Zero Basic): 생존 인프라의 자립

에너지, 물, 식량 등 생존의 필수 자원을 외부 거대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체

내부에서 최대한 순환하고, 자립한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통해, 기초 생존 비용을 낮추고, 기후 재난 시에도 생존을 담보한다.

어반 베이직 (Urban Basic): 기능의 분산과 연결

AI, 원격의료, 디지털 교육,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도시가 제공하던 핵심 기능을 공간의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방 소멸과 강제적 도시 집중 문제를 완화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컬처 베이직 (Culture Basic): 의미와 공동체의 회복

생존을 넘어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문화, 예술, 윤리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경쟁과 고립이 아닌, 나눔과 돌봄이 순환하는 공동체적 삶을 회복한다.



5.3 기술적 실현 가능성:

CES 2026에서 제시된 '생존 기술'의 상용화

살림셀이 추구하는 '자율적 생존'과 '돌봄'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상론이 아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전 세계 기술 트렌드가 거대 성장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생존주권(Survival Sovereignty)' 확보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살림셀의 기술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실증 증거다.

특히 살림셀의 핵심 기능인 먹거리, 에너지, 돌봄 기술은 이미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 1) **먹거리 주권의 기술적 구현 (Food Ark):** 이스라엘 스타트업 미드바(Midbar)가 선보인 '에어팜: 푸드 아크(AirFarm: FOOD ARK)'는 공기 주입식 스마트팜으로, 재난 지역이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독립적인 식량 생산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이는 살림셀이 기후 위기 시 외부 공급망 단절에도 생존을 담보하는 '독립적인 식량 안보 기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에너지 주권의 확보 (Energy Independence):** 중앙 전력망(Grid) 붕괴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 기술도 고도화되었다. 에코플로우(EcoFlow)와 LG전자가 제시한 '홈 에너지 동맹' 및 독립형 에너지 저장 장치(ESS) 기술은, 개별 살림셀이 거대 에너지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로 기능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 3) **돌봄과 연결의 기술 (Tech for Care):** 삼성전자의 '케어 컴패니언(Care Companion)'과 같은 AI 기반 돌봄 기술은 기술이 감시와 통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살림셀 내에서 고립된 개인들을 서로 연결하고, 위기 시 공동체의 안전망을 작동시키는 '어반 베이직(Urban Basic)'과 '컬처 베이직(Culture Basic)'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할 것이다.

이처럼 시장은 이미 '머니로직'의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 삶을 지키고 순환시키는 '살림로직'의 기술적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 살림셀은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기술들을 '생존과 공존'의 철학으로 묶어내는 문명적 조립(Assembly)이다.

살림셀에 적용 가능한 기술 예

구분	적용 목표	핵심 기술 (Tech-Stack)	기대 효과
ZERO BASIC (자립)	에너지/식량/물 100% 순환 및 자립	1. 분산 에너지 (DER): 페로브스카이트 투명 태양광, 소형 풍력, 에너지 하베스팅(압전/폐열) ¹ 2. 그리드 포밍(Grid-forming): 가상발전소(VPP) 연계 ESS, 독립 운전(Islanding) 제어 기술 ²	외부 공급망(한전, 수도, 마트)이 붕괴되어도 최소 7일 이상 독립 생존 가능

구분	적용 목표	핵심 기술 (Tech-Stack)	기대 효과
		3. 푸드 테크 (Agri-Tech): 공기 주입식 스마트팜(AirFarm) ³ , 아쿠아포닉스(물고기-식물 순환) ⁴ 4. 자원 순환: 소형 물 재생 시스템(Water Recycling),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 장치	
URBAN BASIC (연결)	공간 제약 없는 도시급 편의 제공	1. 초연결 인프라: 저궤도 위성 통신(Starlink 등) 백업, 6G 기반 홀로그램 회의 2. AI 헬스케어: 원격 진료 키트, 실시간 생체 신호 모니터링, AI 진단 보조 ⁵ 3. 디지털 트윈: 살림셀 시설물 원격 제어 및 재난 시뮬레이션 4. 로봇 배송: 드론 및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거점 물류 시스템	지방/오지에서도 서울 수준의 의료, 교육, 행정 서비스 향유
CULTURE BASIC (의미)	신뢰 기반의 가치 저장 및 거래	1. 블록체인 원장: 살림바(Salim Bar) 거래 기록, 위변조 불가능한 기여 인증 ⁶ 2. DAO (탈중앙화 조직): 공동체 의사결정 투표 및 재정 투명성 확보 ⁷ 3. NFT/SBT: 살림트로피(Salim Trophy)의 디지털 자산화 및 소유권 증명 ⁸ 4. 매칭 알고리즘: 주민의 달란트(재능)와 필요(Need)를 연결하는 AI 플랫폼	'보이지 않는 선행'을 자산화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 경제 형성

5.4 글로벌 생존 모델과의 비교: 살림셀의 독창성과 확장성

1) 비교의 필요성: 왜 한국형 모델인가? 살림셀은 한국적 특수성에서 출발했지만, 그 지향점은 보편적인 인류의 생존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립, 마을 공동체, 재난 회복력을 개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들과의 비교 분석은 살림셀이 단순한 '또 하나의 모델'이 아니

라, 기존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한 '차세대 생존 표준(Next Global Standard)'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2) 주요 국가별 유사 모델 비교 분석

지역/모델	특징 및 강점	한계점 (머니로직/단편적 접근)	살림셀의 차별화 (통합적 접근)
EU (에너지 커뮤니티)	[Zero Basic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공유,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고도화 ● 법적 기반(EU 지침) 탄탄함 	기술·에너지 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돌봄(Culture)이나 삶의 질(Deep Job)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Tech + Human] <p>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공동체 돌봄과 윤리적 가치를 통합하여 삶의 총체적 회복을 지향함</p>
미국 (마이크로그리드)	[Urban Basic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대비 독립 전력망 구축 ● 민간 주도의 시장 효율성 강조 	상업화·양극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유층 중심의 '벙커'가 될 가능성. ● 사회적 연대(Ethical) 보다는 각자도생의 성격이 강함 	[Public + Private] <p>시장 효율성을 활용하되, 살림바/ESGG를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연대를 구조적으로 내재화함</p>
일본 (마치즈쿠리)	[Culture Basic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방재 활동 ● 강력한 행정 협력 거버넌스 	디지털/에너지 확장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날로그적 공동체 중심, 첨단 기술(AI/Energy)과의 결합이 더딤 	[High-Tech Community] <p>전통적 공동체의 온기에 최첨단 AI와 에너지 기술을 입혀 지속가능성을 확보함</p>
인도/남반구 (자조모임 SHG)	[생존 자립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중심의 소액 금융, 기초 생존 해결 ● 강력한 사회적 포용성 	확장성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표준화나 데이터 자산화(MCI)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역적 구호 수준에 머무름 	[Glocal Standard] <p>지역의 실천을 MCI/살림트로피로 자산화하여 글로벌 자본과 연결하는 금융 모델 제시</p>

3) 살림셀의 위상: "단편적 해법을 넘어선 통합 플랫폼" 위 표에서 보듯, 선진국 모델은 기술(Zero/Urban)에, 개발도상국 모델은 공동체(Culture)에 치우쳐 있다. 살림셀은 이 두 가지 흐름을 '

살림로직'이라는 하나의 운영체제(OS) 위에서 통합한 모델이다.

- **기술의 수용:** EU와 미국의 첨단 에너지·디지털 기술을 적극 수용하되,
- **가치의 보존:** 일본과 인도의 공동체적 돌봄과 윤리를 'Deep Job'과 '청지기 정신'으로 승화시켰다.
- **경제적 지속성:** 무엇보다 '살림자본주의(자산화 메커니즘)'를 통해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의 선점 한국은 이 통합 모델을 테스트하기에 가장 완벽한 '테스트베드'다.

- **제도화 속도:** 한국 특유의 신속한 입법 및 행정 추진력은 '살림셀 특별법' 등을 통해 글로벌 레퍼런스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다.
- **기술력 활용:** 세계 최고 수준의 IT 및 배터리 기술은 살림셀의 하드웨어 경쟁력을 담보한다.
- **규범 선도 (Rule Setter):** 우리가 제안한 ESGG(Ethical Sustainable Global Good) 프레임워크를 통해, 살림셀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로 만든다면, 한국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문명 표준(ISO)을 정립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세계는 지금 살림셀과 같은 모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살림셀은 단순한 국내용 대안이 아니라, "파편화된 전 세계의 생존 실험들을 하나로 꿰어낼 수 있는 완성형 문명 모델"이다.

6장 살림자본주의와 가치 혁명

6.1 가치 창출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살림'의 자산화

살림셀이 지속 가능하려면 구성원들의 선의(Goodwill)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내부의 활동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기록되고 자산으로 전환되는 '경제적 구조'가 필수적이다. 살림로직은 그동안 자본주의가 계산하지 못했던 **생태적 가치(Eco)**와 **윤리적 가치(Ethical)**를 데이터로 포착하여 새로운 부(Wealth)의 원천으로 삼는다.

1) 생태적 가치의 자산화: 조각탄소이니셔티브 (MCI)

- **기존의 한계:** 기존 탄소 시장은 대규모 공장이나 국가 단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탄소 감축 노력은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 **MCI의 혁신:** 살림셀의 에너지 자립과 자원 순환 노력은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를 통

해 정밀하게 측정된다. 태양광 발전,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같은 미세한 활동이 **조각탄소크레딧(MCC)**이라는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는 기후테크 기업에게는 실증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을 돌려주는 **'기후 소득'**의 원천이 된다.

2) 사회적 가치의 자산화: 살림바(Salim Bar)

- 신뢰의 시각화: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인 돌봄, 가사, 재능 기부, 교육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치부되었다. **살림바**는 이러한 행위를 블록체인 기반의 장부에 투명하게 기록한다.
- 무임승차 방지와 신뢰 바우처: 살림바는 화폐로 즉시 교환되지는 않지만, 공동체 내에서 존경과 영향력을 증명하는 **'신뢰 바우처'**로 기능한다. 이는 공동체의 고질적 문제인 '무임승차(Free-riding)'를 방지하고, 기여한 만큼 인정받는 공정한 협력 생태계를 만든다.

MCI가 '지구와의 관계(Eco)'를 측정한다면, 살림바는 '사람과의 관계(Ethical)'를 측정한다. 이 두 축을 통해 살림셀은 막연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를 생산하고 축적하는 구체적인 '가치 창출 단위'로 구조화된다. 그리고 이 정량화된 가치는 다음 절에서 다룰 '살림자본주의'의 기초 자산이 된다.

3) 데이터의 통합과 자산의 완성: 살림트로피(Salim Trophy)

- 이렇게 축적된 MCI(지구에 대한 기여)와 살림바(이웃에 대한 기여) 데이터는 살림트로피라는 하나의 통합 자산으로 발행된다.
- 살림트로피는 살림셀의 건전성과 가치 창출 능력을 증명하는 **'신용 평가서'**이자,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치 증권'**이다. 이를 통해 살림셀은 가치를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가치를 생산하여 자본을 유지하는 단위'**로 경제적 성격을 갖게 된다.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를 통한 정량화 구조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 Mini Carbon Initiative)를 통해 살림셀의 탄소 감축 성과는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정량화된 성과는 조각탄소크레딧(MCC: Mini Carbon Credit) 발행의 근거가 되며, 공공 인센티브 연계, 민간 투자 판단, 정책 성과 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MCI는 대규모 산업 중심의 기존 탄소시장과 달리, 생활, 지역 단위의 미세한 감축 성과를 측정,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CI는 최소한 다음의 MRV(측정, 보고, 검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기준선(Baseline)의 명확화
- 추가성(Additionality) 검증

- 누출(Leakage) 방지
- 감축 성과의 지속성(Perman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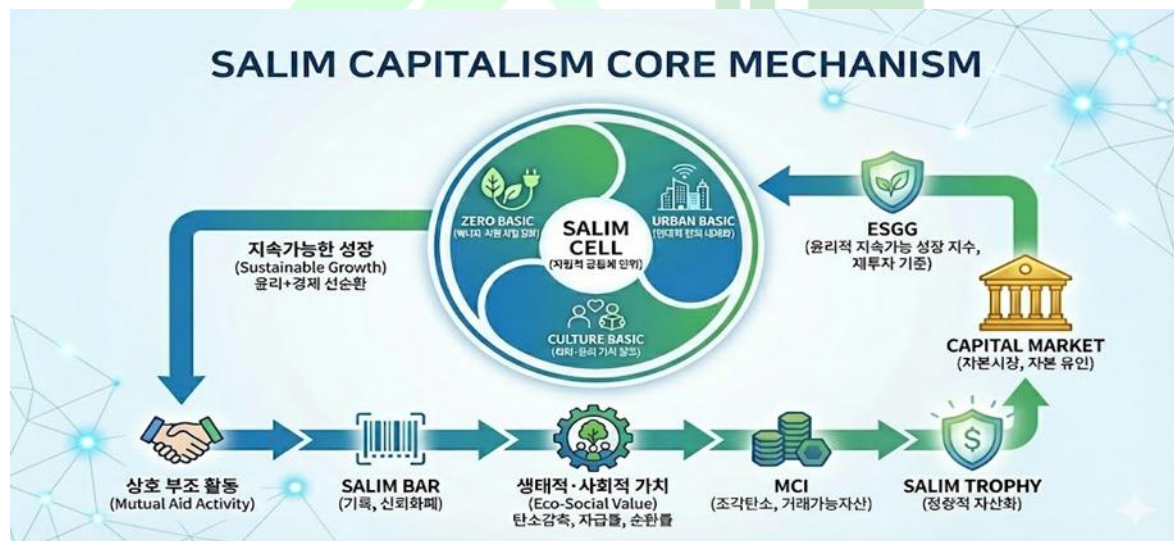
SDX재단은 MCI를 관리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조각탄소크레딧(MCC)을 발행한다.

MCC는 기후테크 별로 발행되고, 기후테크 기업은 실제로 감축 성과를 만들어낸 기후행동 참여자들과 MCC를 분배하는 구조를 갖는다. 살림셀에 다양한 기후테크가 참여하여 개별적인 탄소감축 성과를 축적하면, 이를 취합해 살림셀 단위의 총 탄소감축량을 정량화 할 수 있다.

이러한 탄소감축 실적은 향후 살림셀의 성과지표로 활용되며, 자금률, 순환률 등과 함께 정책, 금융, 산업 언어로 번역한다. 이 과정에서 살림셀은 기후테크 기업에게 실증 공간이자 초기 시장을 제공하고, 기술은 공동체의 확산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요를 확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될수록 관련 부품과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다. 살림셀이 확산될수록, 기후테크의 시장 역시 함께 확산되고, 기술 혁신 또한 가속화된다. 즉 조각탄소감축에 기여하는 기후테크가 정당한 탄소 성과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MCI의 목표다.

결과적으로 살림셀 × MCI 구조는 기후 대응을 규제 중심의 부담 모델에서 벗어나, **성과 기반의 확산 모델**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6.2 살림자본주의로의 경제 전환

살림셀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살림자본주의(Salim Capitalism)'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요구한다.

기존 자본주의가 '채취-생산-소비-폐기'의 선형 구조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며 기후 위기를 가속화
전하진

했다면, 살림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내부에 '치유 메커니즘'을 이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회로에 생존과 회복이라는 조건을 강제하는 규칙 변경이다. 이는 기부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에 머물던 생태 보전, 탄소 감축, 돌봄 등의 '살림 행위'를 시장 교환 가치의 핵심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살림셀은 소비의 단위가 아니라 생산과 회복의 주체가 되며, 살림셀의 활동 실적을 주식회사의 실적처럼 평가하고 가치화하여,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생'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BOX] 살림셀 1개소(100인)의 연간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시뮬레이션

"살림셀은 비용을 쓰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비용을 벌여주는 곳입니다."

기준 모델: 표준형 살림셀 (인구 100명 / 약 40가구 / 공유지 1곳)

적용 기준: Zero Basic(에너지 자립 60%), Urban Basic(원격의료·교육), Culture Basic(공동 돌봄) 적용 시

1. 탄소 감축 효과 (조각탄소이니셔티브 MCI 기반)

에너지 자립: 태양광 분산 발전으로 연간 전력의 60% 자체 생산
 기존 한전 전력 대체 효과: 연간 약 120,000kWh 청정 에너지 생산
 탄소 감축량: 약 56톤 CO₂eq/년 감축 (소나무 8,500그루 식재 효과)
 생활 속 감축: 음식물 쓰레기 100% 퇴비화 및 로컬 푸드 30% 자급
 자원 순환 감축분: 약 14톤 CO₂eq/년 추가 감축

👉 [Total] 연간 70톤의 탄소 감축 → MCC(조각탄소크레딧) 자산 발행

2.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국가 재정 효율성)

돌봄 예산 절감 (Self-Care): 노인 20명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 지연 및 고독사 예방
 국가 부담 요양 급여 절감: 1인당 월 150만원 × 20명 × 12개월 = 3.6억 원 절감
 에너지 인프라 회피 비용: 송전탑 및 대형 발전소 건설 회피
 전력망 보강 회피 편익: 연간 약 0.5억 원 (분산에너지 편익 추산)
 재난 복구 예방 비용: 기후 재난 시 피해 최소화 (회복탄력성)
 사후 복구비 기회비용: 연간 약 1억 원 (평균 피해액 대비 예방 효과)

👉 [Total] 국가 재정 연간 약 5.1억 원 절감 효과

3. 살림셀의 경제적 가치 (살림자본주의 모델)

주민 생활비 감소: 에너지·식량 자급으로 가구당 월 50만원 생활비 절감
 공동체 전체: 연간 2.4억 원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
 자산화(Assetization): 탄소 감축분(MCC) + 사회적 비용 절감분(ESG 성과)

👉 연간 약 1억 원 상당의 살림트로피(Salim Trophy) 가치 유동화 가능

살림셀 1,000개를 만들면 연간 5,0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구체적인 실천 모델로서 **살림자본주의**는 MCC와 살림바를 통한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지표 등으로 인증된 살림셀의 성과지표에 부가적인 예술 작품 등을 내재화한 살림트로피를 하나의 유동 자산으로 만들어 이를 자본시장에서 유통시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살림트로피가 자본시장에 중요한 자산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자본이 살림셀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여 문명의 전환을 촉진 하자는 것이다.

6.3 성장에서 성숙(Maturity)으로: 윤리적 풍요의 시장 메커니즘

하방 지지선(Downside)과 상방 가능성(Upside)

살림셀의 1차적 목표는 명확하다. 기후 재난과 경제 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닥쳐도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다. 제로 베이직(Zero Basic)을 통해 에너지와 식량을 자립하고, **살림트로피(Salim Trophy)**를 통해 이를 자산화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하방 지지선(Downside Protection)**'을 구축하는 단계다.

그러나 단순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문명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생존주권이라는 튼튼한 뿌리 위에서, 우리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숙(Maturity)**'이라는 '**상방 가능성(Upside)**'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성숙재(Maturity Goods)의 탄생: Deep Job의 결실

살림셀 구성원들이 생존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의 달란트를 실현하는 살림노동 즉 '**딥 잡(Deep Job)**'에 몰입할 때, 그 결과물은 단순한 공산품과 다르다.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고유한 창작물과 지혜, 즉 '**성숙재(Maturity Goods)**'가 된다.

성숙재의 정의: 공동체를 치유하는 돌봄 기법, 탄소 배출 없는 요리 레시피, 지역 고유의 문화 예술, 삶의 지혜를 담은 교육 콘텐츠 등 인간의 정신과 문화를 고양시키는 유무형의 재화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풍요를 넘어, 지구생태계와 모든 생물종의 지속가능한 공존에 이바지하는 윤리적 가치의 총체다.**

시장 메커니즘의 진화: 자본주의 엔진으로 윤리를 가속하다

성숙재 시장은 살림자본주의의 핵심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장이 '시장 메커니즘(교환, 경쟁, 인센티브)'이라는 자본주의의 엔진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엔진에 주입되는 연료(재화의 성격)가 다르기에, 배출되는 결과(Output)는 '양극화'가 아닌 '**윤리적 풍요**'로 나타난다.

- **재화의 변화 (경합재 → 비경합재):** 기존 머니로직 시장의 재화(석유, 식량, 부동산)는 내가 가지면 남이 못 가지는 '**경합재(Rival Goods)**'다. 이 시장은 필연적으로 희소성에 기반하며,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결핍을 조장한다. 반면, 성숙재(지혜, 문화)는 남에게 주어도 내 것이 줄어들지 않는 '**비경합재(Non-rival Goods)**'다. 이는 나누면 나눌수록 사회 전체의 가치 총량이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든다.
- **인센티브의 변화 (독점 → 기여):** 좋은 성숙재를 만들어 '**살림망(Salim Network)**'에 공유한 살림셀은 더 많은 '살림트로피(보상)'를 획득한다. 남을 많이 이롭게 할수록(기여), 자신

이 더 부유해지는(보상) 자본주의적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것이다.

살림망(Salim Network)을 통한 윤리적 풍요의 확산

각 살림셀에서 생산된 성숙재는 고립되지 않고 '살림망'을 통해 전 세계로 흐른다.

A 살림셀의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노하우가 B 살림셀을 구하고, C 살림셀의 독창적인 돌봄 문화가 D 살림셀의 교육 콘텐츠로 진화한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가난해지지 않는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이 현상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윤리적 풍요(Ethical Abundance)'다.

머니로직 시장과 살림로직(성숙재) 시장의 메커니즘 비교

구분	머니로직 시장 (기존 자본주의)	살림로직 시장 (성숙재 시장)
거래 대상	물질, 토지, 금융 상품 (경합재)	지혜, 문화, 돌봄, 기술 (비경합재)
작동 원리	희소성(Scarcity)에 기반한 가격 상승	연결성(Connectivity)에 기반한 가치 증폭
성공 방식	경쟁과 독점 (남을 이겨야 함)	기여와 공유 (남을 살려야 함)
결과 (Outcome)	양극화 (승자독식, Zero-sum)	윤리적 풍요 (상호번영, Positive-sum)

성숙한 문명으로의 진입

결국 살림셀이 추구하는 업사이드 전략은 더 많은 물자를 소유하기 위해 지구를 파괴하는 '성장'의 시대를 끝내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내면이 깊어지는 '성숙'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살림트로피로 경제적 생존을 해결하고, 성숙재와 살림망을 통해 인류의 정신과 문명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것. 이것이 살림자본주의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다.

6.4 현재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대안들

미래의 생존주권은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행성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 사회에서는 거버넌스, 경제, 법제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1) 거버넌스의 혁신: 지구 신탁 위원회(Earth Trusteeship Council): 현재 기능이 정지된 유엔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를 개편하여, 식민지 신탁통치가 아닌 지구 커먼즈(Planetary Commons)와 미래 세대를 위한 신탁통치 기구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의 단

기적 이익이 아닌, 지구 생태계의 무결성과 장기적 생존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주권을 소유의 개념에서 보호와 관리의 책임(Stewardship)으로 재정의하는 법적 혁명이라 할 수 있다.

2) 경제적 권리의 재구성: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경제적 차원에서의 미래 생존권은 노동과 생존의 고리를 끊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임금 노동의 대가로만 규정하는 기존 복지 국가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생존권을 실질적인 권리(Right to Existence)로 구현하는 방안이다. 이는 자선이 아니라 공유가치(Common Wealth)에 대한 배당의 성격을 가지며, 인간이 경제적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노동을 하거나 굴욕적인 심사를 받지 않고도 존엄하게 생존할 수 있는 물적 기초를 제공한다.

3) 법적, 철학적 대전환: 세계 환경 헌장과 생태적 주권: 파편화된 국제 환경법을 통합하고 환경권을 인권의 핵심으로 격상시키는 세계 환경 헌장(Global Pact for the Environment)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2022년 유엔 총회가 인정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나아가 미래의 주권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자연, 동물)와의 공생을 전제로 하는 생태적 주권(Ecological Sovereignty)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나 해러웨이가 제안한 공생(Sympoiesis, 함께-만들기)의 철학처럼 인간의 생존이 지구상의 다른 존재들과의 복잡한 의존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지구 신탁이나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다양한 논의가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이 야심 찬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전히 지배, 성장,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머니로직(Money Logic)**의 거대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신탁 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모델은 국가 간의 첨예한 주도권 다툼과 자원 지배라는 머니로직의 벽에 부딪혀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도 기존의 수급 체계나 화폐 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순환, 공존, 자원의 **에코로직(Eco-Logic)**을 바탕으로 한 살림, 풍요, 윤리의 **살림로직(Salim Logic)**으로 문명적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체계의 변화와 로직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7장. 다중위기를 돌파하는 살림셀의 4대 구조적 해법

7.1 [개요] 다중위기의 분해와 4대 해법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복합적인 위기다. 그런데 이 위기들이 이미 정책 대응 속도와 규모를 초과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 중심 정책이나 시장 조정 메커니즘으로는 위기를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으나,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기를 구조적으로 완화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살림셀 전략의 핵심은 이 거대한 위기들을 감당 가능한 크기로 '**분해(Decomposition)**'하고, 이를 다시 최소 단위로 재구성하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살림셀은 위기를 단순히 회피하는 대피소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원에서 위기의 고리를 끊어내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 [에너지] 에너지 수요를 '**분산형 에너지 자립**'으로 해결하여 안보와 산업을 지킨다.
- [노동] 소멸되는 일자리를 '**Deep Job**'으로 전환하여 삶의 의미를 회복한다.
- [기술] 기술에 의한 인간 소외를 막고, 기술을 '**인간 존엄을 지키는 도구**'로 재배치한다.
- [인구] 고비용 생존 구조를 혁파하여 '**아이 낳고 싶은 서식지**'를 복원한다.

이 장에서는 살림셀이 이 4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지를 다룬다.

살림셀은 그 자체로 사업 주체나 투자 대상이 되는 조직을 의미하지 않는다. 살림셀은 '권리의 최소 단위'이며, 실제 운영, 투자, 수익, 유지보수는 별도의 실행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살림셀이 국가 재정 부담을 확대하거나 공공 영역을 잠식하는 모델이 아니라, 기존 재정, 정책 수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실행 단위임을 의미한다.

살림셀 운영을 위한 실행 주체는 다음과 같은 형태 중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될 수 있다.

- 협동조합형 운영 조직
- 지자체 위탁형 비영리 법인
- 민관 협력 특수목적법인(SPC)

이처럼 유연한 실행 구조를 바탕으로, 살림셀은 각 영역별 다중위기(Polycrisis)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지, 그 첫 번째 전략적 고리는 모든 생존 활동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서 시작된다.

7.2 [에너지] 분산발전과 AI 산업의 공존 메커니즘

살림셀은 거대 자본과 중앙 집중형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는 '생존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순환시키는 정교한 인프라를 기본으로 설계한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 시설이다.

1) 소규모 분산 전원의 논리적 통합 살림셀의 에너지는 산림을 파괴하거나 거대 부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가 아니다. 대신 생활 공간 속의 유휴지, 옥상, 베란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과 소형 풍력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

가상 발전소(VPP) 기술의 적용: 개별 살림셀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은 낭비되지 않고, ICT 기술로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된다. 이는 중앙 전력망이 차단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커뮤니티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다.

2) 완전 순환 시스템 살림셀 내의 모든 자원은 '폐기'되지 않고 '순환'된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스마트팜이다.

자원의 다단계 활용: 물고기의 배설물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이 정화한 물이 다시 수조로 돌아가는 생태 순환 원리를 적용한다.

3) 에너지 재활용 발전 과정이나 스마트팜 운영 중 발생하는 폐열(Waste Heat)과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활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및 재순환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극대화한다.

결국 에너지 시스템은 살림셀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다. 마치 현대 도시에 수도와 전기가 필수적으로 연결되듯, 살림셀에는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모듈**'과 '**자원 순환 모듈**'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살림셀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살림셀이 확대되면 될수록 기존의 전력 수요가 분산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AI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산발전의 잇점은 다음과 같다.

- **중앙 전력망의 부하 감소:** 살림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저장(ESS)함으로써, 국가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송전망 회피와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송전망 추가 건설 없이도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 **AI 전략산업 지원 (이중 효과):** 살림셀을 통해 확보된 중앙 전력망의 여력은 AI 데이터 센터 등 국가 전략 자산에 우선 배분될 수 있다. 이는 기후 대응(탄소 감축)과 산업 발

전(AI 전력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중 효과(Double Dividend)**'를 창출한다.

- **경제적 유인:** 분산 발전된 전력은 단순 소비를 넘어,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와 연계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원이 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

7.3 [노동] '생계(Job)'에서 '소명(Deep Job)'으로

AI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소멸은 위기가 아니라, 인류를 고된 생계 노동에서 해방시킬 기회다. 단, 이를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이웃을 돌보는 노동**'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딥 잡(Deep Job)**'이라 정의한다.

1) Deep Job의 본질: 달란트를 발견하는 삶의 여정 딥 잡(Deep Job)이란, 생계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음식 만들기, 청소, 목공, 텃밭 가꾸기 등 삶을 돌보는 일상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여, 자아를 실현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기 성과를 넘어 사회·생태·공동체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가치를 창조하고 구조화 하는 '**가치 노동**'이다.

자신의 삶을 직접 돌보는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학습 과정이다. 기계적인 일상의 반복이라 여겨졌던 이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인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삶을 충만하게 사는 길이며, 가치 노동 즉 Deep Job의 본질이다.

2) 보상의 재정의: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윤리적 가치와 내면의 풍요가 삶의 목표가 될 때,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경제적 이익과 명예는 '덤'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경제적 이익과 명예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미 살고 있음이 Deep Job의 본질인 것이다.

Deep Job은 일상을 통해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에 대한 유혹이 상쇄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돈이 나를 위해 움켜쥐어야 하는 '**생존의 무기**'였다면, 살림로직에서의 돈은 나의 달란트로 공동체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진정한 보상**'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 전도(Value Inversion)**'다.

3) 살림셀: 생존의 자립(Zero Basic) 생계 비용을 낮춰 줌으로써, 구성원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일상(음식, 청소 등)에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제공한다. 또한 공동체의 협업 과정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집단지성을 통한 가치 창출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살림셀이 지향하는 바다. 생존의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인간은 밥을 짓고, 집을 고치고, 이웃을 돌보며 자신의 달란트가 꽃피는 Deep Job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알게 된다.

7.4 [기술] 인간 존엄을 위한 기술 통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삶의 현장에서 검증한다."

현재의 머니로직(Money Logic) 하에서 기술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AI는 가짜 뉴스(Deepfake)와 중독 알고리즘을 양산하고, 데이터 기술은 개인을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거대 자본은 이윤을 위해 기술의 윤리적 부작용을 외면한다.

그러나 **살림셀(Salim Cell)**은 다르다. 생존과 공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살림셀은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로 머물게 하는 '**기술 윤리의 안전지대(Safe Zone)**'이자 '**실증 단지**'가 된다.

살림셀에서 기술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재정의되는지 보여주는 3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착취적 AI에서 '돌봄 AI'로의 전환 머니로직의 문제: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시간을 빼앗고 중독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무한 재생산한다. 이는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하는 '착취적 AI'다.

살림셀의 윤리적 사례: 살림셀 내의 AI는 오직 '**거주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살림 케어 AI**'는 독거노인의 낙상을 감지하거나, 전력망이 끊겼을 때 비상 에너지를 최적으로 분배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상업적 광고나 데이터 판매를 위한 알고리즘이 원천 차단된 이 사례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 복무할 때 얼마나 안전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표준이 된다.

2) 감시 데이터에서 '공유 데이터'로의 전환: 머니로직의 문제: 빅테크 기업들은 개인의 생체 정보와 생활 패턴을 수집해 상업적으로 판매한다. 개인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라 채굴 대상이 된다.

살림셀의 윤리적 사례: 살림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생산량, 식량 재배 데이터, 건강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커뮤니티 데이터 트러스트**'에 저장된다. 이 데이터는 이웃의 살림셀이 기후 위기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돕는 '오픈 소스(Open Source)' 지식으로 공유된다. "나의 정보가 나를 감시하는 데 쓰이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데 쓰인다"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의 실현은 데이터 윤리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다.

3) 독점적 바이오에서 '토종 종자'의 기술적 보존 머니로직의 문제: 거대 농화학 기업은 유전자 조작(GMO) 종자를 통해 식량 생산을 독점하고, 농부가 씨앗을 다시 심지 못하게 기술적으로 막는다.

살림셀의 윤리적 사례: 살림셀의 스마트팜은 토종 종자의 형질을 분석하고 보존하는 '디지털

노아의 방주' 역할을 수행한다. 최첨단 환경 제어 기술을 사용하여, 기후 변화에 취약한 토종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무상으로 공유한다. 기술이 자연을 통제하고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다양성을 지키고 복원하는 데 쓰이는 윤리적 농업의 모델을 보여준다.

거대 담론이나 법적 규제만으로는 폭주하는 기술을 통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살림셀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윤리적으로 사용된 기술이 내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경험이 쌓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살림셀에서 입증된 '선한 기술'의 효용은 이웃 셀로, 지역 사회로 전파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건강한 세포가 병든 조직을 치유하듯, 살림셀의 윤리적 기술 사용이 머니로직의 기술 남용을 정화하고 대체해 나가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될 것이다.

기술위험의 본질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효율성의 논리로만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데 있다. 살림셀은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윤리적 거점이다.

- **윤리적 샌드박스(Ethical Sandbox):** 살림셀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그 기술이 공동체의 안전과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생활 속에서 검증하는 실험장이다.
- **주권적 선택:** 기술 도입의 기준은 '비용 효율'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공동체 유지'다. 주민들은 기술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기술을 내 삶에 들일지 결정하는 주체적 권한을 행사한다.
- **도구로서의 기술:**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거나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돌봄과 자급 능력을 증강(Augmentation)시키는 보조 수단으로 철저히 재배치된다.

7.5 [인구] 인구 소멸 해법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머니로직(Money Logic)의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비용, 고위험 프로젝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살림셀은 현금성 지원을 넘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태적 서식지(Habitat)' 자체를 복원한다.

1) 경제적 장벽의 해체: Zero Basic의 효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주원인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 생존 비용의 폭등이다. 에너지와 먹거리를 자급하고,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살림셀(Zero Basic) 환경에서는, 적게 벌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 생존의 문턱이 낮아질 때, 비로소 다음 세대를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2) 홀로 육아에서 공동체 육아로: **Culture Basic** 의 회복 핵가족화와 각자 도생의 도시 구조는 육아를 오롯이 개별 가정의 짐으로 만들었다. 살림셀은 끊어진 이웃 관계를 회복하여 '마을 전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 돌봄 시스템을 제공한다. 육아가 고립된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축제가 되는 환경에서 출산에 대한 공포는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3) 육아의 재정의: 비용에서 '**Deep Job**'으로 머니로직에서 육아는 '경력 단절'이자 '비용'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살림로직에서 생명을 돌보는 행위는 가장 숭고한 **가치 노동**인 '**딥 잡(Deep Job)**'으로 재평가된다. 살림바(Salim Bar)를 통해 육아와 돌봄 노동이 가치(신뢰 바우처)로 기록되고 인정받는 시스템은 부모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출산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이 살림셀은 인구 소멸을 막는 '**구조적 방파제**'이자, 미래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요람**'이 될 것이다.

문명사적 '컨테이너'로서의 살림셀

물류 혁명을 일으킨 '컨테이너'가 전 세계의 항만, 선박, 트럭 등 모든 물류 표준을 재편했듯이, 살림셀은 다중위기 시대 인류의 삶을 재편할 새로운 '문명사적 컨테이너'다.

이 구조적 단위가 확산될 때, 산업은 살림셀에 맞는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며, 인류는 위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며 새로운 풍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표준 단위를 정의하고 실증하여 확산시키는 일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살림셀을 이끌 인재상은 어떠한 지, 그리고 이를 제도, 경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떻게 정착시키고 확산할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8장. 미래를 여는 열쇠: 살림셀을 리드하는 인재상

본 보고서는 생존권이 국가와 시장, 기술에 의해 점차 외주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실질적 생존 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생존주권을 다시 인간의 손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기술만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고 유지할 **주체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살림셀은 하나의 제도적, 기술적 장치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인간의 판단과 책임이다. 따라서 생존주권의 실질적 구현은 "어떤 인간이 이 구조를 떠받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8.1 청지기(steward)로서의 인간: 소유자에서 관리자로

산업 문명(머니로직)은 인간을 주로 노동력 공급자 또는 소비 주체로 규정해 왔다. 지배, 성장,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이러한 인간상은 과거 양적 성장기에는 기능했으나, 다중위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살림셀의 핵심 주체로서 인간을 **청지기(steward)**로 재정의한다. 청지기로서의 인간은 자연과 공동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환, 공존, 자원의 에코로직을 바탕으로 **생태계와 사회적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을 지는 존재**다. 이는 주권을 통제의 권리에서 수탁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논의와 긴밀히 연결된다.

사실 이러한 청지기 정신은 낯선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위대한 종교적 유산이 공통적으로 가르쳐 온 '오래된 미래'다. 기독교의 '**오이코노미아(Oikonomia)**'는 인간을 신의 창조물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규정하며 소유가 아닌 관리의 책임을 강조했다. '오이코노미아'는 '경제(Economy)'의 어원이기도 하므로, "원래 경제는 돈벌이가 아니라 살림(관리)이었다"는 살림로직의 철학적 근거가 된다.

불교의 '**인다라망(Indra's Net)**' 역시 우주 만물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 타자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상호의존적 세계관을 설파한다. 이슬람교의 '**칼리파(Khalifa)**' 또한 인간을 지구를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라 신을 대신해 자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관리자'로 정의한다. 결국 살림로직은 이러한 종교적 영성과 지혜를 현대적 언어로 복원하여, 탐욕의 '머니로직'으로 병든 문명을 치유하고자 하는 실천적 응답이다.

이러한 인간상은 다음과 같은 인식 전환을 포함한다.

- 생존을 외부 권력에 구걸하는 객체에서, 생존 조건을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주체로의 전환
- 효율 중심 판단에서, 회복력과 지속성을 우선하는 판단으로의 이동
- 개인의 성취에서 공동체적 기여를 통한 자아 실현으로의 재구성

살림, 풍요, 윤리를 핵심 가치로 하는 살림로직에서의 인간은 더 이상 생존의 수혜자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을 유지하는 핵심 행위자이다. 이는 마치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어 가족을 돌보듯, 인류 역시 미성숙한 단계를 지나 지구의 생존 조건을 직접 유지하는 성숙한 행위자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과 같다.

8.2 살림셀 리더십의 핵심 역량: SERA

살림셀은 고도의 기술 시스템 기반 위에, 인간의 협력과 책임이 작동하는 유기적 구조다. 따라서 살림셀을 유지, 확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특정 유형의 역량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이를 **SERA(Story, Empathy, Resilience, Achievement)**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정리한다.

첫째, **스토리(Story):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 스토리는 살림셀의 활동을 단순한 생존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서사로 연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기여를 단절된 노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공동의 서사 속 소중한 역할로 인식한다. 물질적 소유보다 자신이 써 내려가는 고유한 정체성의 스토리가 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된다.

둘째, **공감(Empathy): 공존과 돌봄의 감수성** 공감은 돌봄과 상호의존을 살림셀 운영의 핵심 원리로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는 살림셀이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성에 대한 감지와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생태계의 다른 생물종과의 공감능력은 청지기 리더십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회복탄력성(Resilience): 자율적 생존 안전망** 회복탄력성은 기후 재난, 에너지 위기, 공급망 붕괴와 같은 외부 충격 속에서도 공동체와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강인함을 넘어, 자원, 관계, 기술의 분산 구조를 포함하는 집단적 실천 역량을 의미한다.

넷째, **성취(Achievement): 내면의 달란트가 꽃피는 순간** 머니로직의 성취가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얻는 외적 보상(돈, 지위)이라면, 살림로직의 성취는 Deep Job 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내적 기쁨이다. 우리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밥을 짓고 집을 고치는 매일의 성실한 '살림' 속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를 '성취'라 부른다. 이러한 '**윤리적 성취**'가 쌓일 때, 경제적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덤이 되며, 이것이 바로 살림셀을 이끄는 리더십의 원동력이다.

살림셀의 리더십은 전통적인 통치 권력과 성격을 달리한다. 이는 명령과 강제의 권력이 아니라, **유지와 연결의 권력**이다. 살림 권력은 위계적 통제보다는 책임의 분산을 통해 작동하며, 권력의 크기는 지배 범위가 아니라 돌봄과 조정의 범위로 나타난다.

8.3 실천적 청지기 양성: 살림 미래 리더십 아카데미(SERA)

살림셀이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려면 기술적 시스템(하드웨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시스템 안에서 'Deep Job'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는 주체(소프트웨어)들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미래의 청지기를 양성하기 위해 SERA(Salim Education & Research Academy)를 설립하고, 독창적인 'SERA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Target)과 그들을 훈련하는 교육 과정(Training)은 'SERA'라는 동일한 이름을 갖지만, 그 지향점은 '원인'과 '결과'로 완벽하게 대응된다.

1) 교육 과정 (Training SERA): 청지기를 만드는 4 대 실천 훈련 SERA 아카데미는 단순한 지식 전달 기관이 아니다. 이곳은 다음 4 가지 실천 훈련을 통해 생계형 인간을 가치 창출형 청지기로 변모시키는 '전인적 훈련의 장'이다.

- **S - Spirit (살림 정신):** 죽임의 문명(머니로직)을 넘어 살림로직의 철학(Why)을 체화하는 인문·철학 훈련.
- **E - Eco-skills (생태 기술):** 에너지 자립, 집수리, 텃밭 등 의식주(Zero Basic)를 내 손으로 해결하는 생존 기술 습득.
- **R - Relationship (관계 기술):** 공동체 갈등 조정, 비폭력 대화, 합의 형성(Consensus) 등 공존을 위한 리더십 훈련.
- **A - Action (현장 실천):** 실제 살림셀 현장에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기록하며 성과를 만드는 프로젝트 수행.

2) 교육 목표 (Target SERA): 우리가 지향하는 인재상 위의 훈련 과정을 거친 수료생은 비로소 다음과 같은 내면의 역량을 갖춘 '**SERA 형 인재**'로 거듭난다.

- **(S) Story:** 확고한 철학(Spirit)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갖게 된다.
- **(E) Empathy:** 타인과의 조율(Relationship)을 배우며 이웃과 자연에 공명하는 깊은 공감 능력을 얻는다.
- **(R) Resilience:** 생존 기술(Eco-skills)을 익혔기에 어떤 위기에든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회복탄력성을 확보한다.
- **(A) Achievement:** 현장 실천(Action)의 작은 성공들이 쌓여, 윤리적 자부심과 내면의 성취를 완성한다.

자격 인증: 살림 큐레이터와 트로피스트 SERA 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에게는 살림셀 내부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어 자산화(MCI, 살림바)하는 '**살림 큐레이터(Salim Curator)**' 자격을 부여한다. 나아가 최고의 숙련도와 신망을 얻은 리더는 '**살림 트로피스트(Salim Trophist)**'로 추대되어, 살림로직 생태계의 가치를 수호하는 명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9 장. 살림셀의 단계적 추진과 제도적 정착

본 장에서는 살림셀과 살림자본주의가 이론적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회 시스템 안에서 단계적으로 구현, 확산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한다. 살림셀은 단일한 모델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제도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증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이다. 따라서 본 장의 목적은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셀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한 공통된 추진 원리와 제도적 연결 방식을 정리하는 데 있다.

9.1 살림셀의 단계적 확산 로드맵

살림셀의 전국적 확산은 동시다발적인 혁명이 아니라,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점진적 침투'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의 관성이 강한 곳보다는, 시스템의 붕괴가 임박해 변화의 수용성이 높은 곳을 '혁신의 교두보(Beachhead)'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공 모델을 검증하고, 그 효용을 바탕으로 저항이 강한 중심부로 확산해 나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Phase 1 (2026-2027): 생존의 교두보 확보 (실증 거점 구축)

"가장 필요한 곳에서 시작하여, 작동 가능성을 증명한다."

대상: 소멸 위험 최고 등급 지역 10곳 +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군부대 5곳

선정 이유:

이 지역들은 이미 의료 붕괴, 인구 소멸, 보급난 등 기존 머니로직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보다는 생존을 위한 수용성이 훨씬 높다. 특히 군부대는 명령 체계로 작동하는 독립된 사회로, 에너지, 식량 자립(Zero Basic)과 원격 의료 등(Urban Basic)을 실험하기에 최적의 테스트베드다.

핵심 목표:

- 살림 큐레이터 우선 파견을 통한 주민 신뢰 형성
- 살림셀의 기술적, 사회적 작동 가능성(Feasibility) 입증
- 살림트로피 발행 및 보상 체계의 초기 안정화
- '살림셀이 들어서니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성공 사례(Best Practice) 확보

Phase 2 (2028-2029): 에너지와 경제의 결합 (산업, 학교 전환)

"에너지 효율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규모를 확장한다."

대상: 전국 30개 노후 산업단지 + 100개 초, 중, 고등학교

선정 이유:

산업단지와 학교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거점이다. 이곳을 살림셀 기반의 분산 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국가 전력망의 부하를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업은 RE100 달성과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해, 학교는 교육 및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살림셀 도입의 명분이 뚜렷하다.

핵심 목표:

- 기후테크 기업들에게 대규모 실증 시장 제공 (Market Creation)
-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 참여 주체 1만 개로 확대 및 탄소 데이터의 자산화 실현
-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데이터로 증명하여 정부 지원의 타당성 확보

Phase 3 (2030 이후): 삶의 표준으로 정착 (주거 혁명)

"가장 거대한 시장을 흔들어, 국민의 일상을 바꾼다."

대상: 준공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 500개 단지

선정 이유:

아파트는 대한민국 주거의 표준이자,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가장 심한 곳이다. 그러나 2030년 시점이 되면 노후화로 인한 슬럼화 위기와 기후 비용(냉난방비) 급증으로 인해 리모델링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이때 단순한 물리적 수선이 아닌, 에너지 자립과 돌봄 기능이 탑재된 '살림 리모델링'을 자산 가치 방어에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핵심 목표:

- '살림 리모델링'을 국가 그린 리모델링 정책의 표준 모델로 법제화
-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공간의 살림셀화 추진
- 2035년까지 전체 인구의 30%를 살림셀 네트워크로 편입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

이 로드맵은 국가의 소멸 대응 예산 효율화, 2) 에너지 안보 강화, 3) 국민의 자산 가치 보전이라는 실질적 이익(Interest)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살림셀의 효능이 실증되면, 4) 전 세계로 확산이 가능한 전략산업이 될 수 있으며, 거대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5) 인간의 청지기 시대를 여는 대전환을 혁신적으로 빠르게 구현하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도시나 발전소처럼 건설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기존 산업을 살림셀에 맞게 조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우리의 다양한 기술기반과 우리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살림셀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침체되어가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살림셀은 이렇게 변방에서 시작하여 중심으로 나아가는 '구조적 전환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다.

9.2 가치 기록과 외부 연결 메커니즘

가치 기록과 자산화: 살림셀의 유동화와 확산 메커니즘

살림셀의 지속 가능성은 내부의 기여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그것이 외부의 자본과 결합하여 순환하는 구조에 달려 있다. 본 보고서는 살림셀을 단순한 공동체가 아닌 '주식회사와 같은 하나의 자

산 단위'로 정의하여, 이를 평가하고 유동화하기 위한 통합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살림인덱스: 살림셀의 정량적 지표

살림인덱스는 살림셀의 건전성을 증명하는 '블랙박스'이자 '데이터 대시보드'이다. 이는 화폐로 환산되지 않던 **돌봄, 노동, 협력의 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살림셀의 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수치화한다. 기초적인 데이터로는 MCI를 통한 실질적 **탄소 감축량, 에너지 및 식량 자급률, 자원 순환률** 등도 정밀하게 측정하고 기록한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내부 보상 체계를 넘어, 해당 살림셀이 얼마나 지구적 선(Global Good)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신용 평가서' 역할을 수행한다.

살림트로피(Salim Trophy): 가치의 자산화와 유동화

살림트로피는 **ESGG, MCI, 살림바** 등을 활용하여 기록된 정량적 데이터(내재 가치)를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형태(시장 가치)로 변환하는 '가치 번역 및 유동화 장치'이다.

예술과 데이터의 결합 (Philanthropy Asset): 살림트로피는 살림셀의 성과 지표(데이터)에 전문 예술가의 창의성(예술 작품)을 결합하여 발행된다. 이는 단순한 인증서를 넘어, 소장 가치가 있는 '필란트로피(Philanthropy) 자산'으로 기능한다.

살림셀의 유동화(Securitization): 살림셀은 마치 상장 기업처럼 자신의 성과(탄소 감축, 공동체 회복 등)를 살림트로피 형태로 발행하여 외부 투자를 유치한다.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슈퍼리치(Super-rich)들은 이 트로피를 구매하거나 후원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사회 전환에 기여하는 동시에 가치 있는 자산을 확보하게 된다.

인프라 금융 혁신: 좌초 자산의 헷징과 안전 자산으로의 이동을 추진한다. 기존 머니로직 하의 자산들은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로 인해 가치가 급락할 '좌초 자산(Stranded Assets)'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살림자본주의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리스크 헤징(Risk Hedging)의 수단: 살림트로피는 다중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의 회복탄력성과 생존 역량을 담보한다. 이는 변동성이 큰 화폐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성적 안전 자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선순환 금융 모델: 초기 인프라 구축은 '살림 인프라 신탁'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되, 이후 살림셀이 창출한 살림트로피(탄소 감축 및 사회적 가치)로 비용을 상환한다. 이를 통해 자본은 의미 있는 곳에 투자되고, 경제적 약자는 진입 장벽 없이 살림셀의 주체가 되는 공존의 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9.3 ESGG 인증과 거버넌스 연계

ESGG(Ethical Sustainable Global Good) 프레임워크는 살림셀 내부의 미시적 실천을 전 지구적 차원의 가치로 번역하는 표준화된 문명 언어이다. 이는 살림셀이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상호 비교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생존 지식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가치 번역의 표준: 글로벌 소통 언어로서의 ESGG

ESGG는 살림로직의 세 가지 원칙인 살림, 풍요, 윤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전환되는 측정 체계이다. 이는 에코로직의 순환, 공존, 자율이 살림셀 내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가치 전환 메커니즘: 살림셀 내부에서 살림바(Salim Bar)를 통해 기록된 상호 부조와 돌봄의 가치는 ESGG 인증 과정을 거쳐 외부 세계가 인정하는 자산인 살림트로피(Salim Trophy)로 번역된다. 내부의 무형적 가치가 외부의 유효한 경제적 가치로 탈바꿈하는 핵심 고리이다.

머니로직과의 접점: 지배, 성장, 경쟁을 우선하는 머니로직 체계의 외부 자본이 살림셀의 가치를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ESGG는 윤리적 기여도를 정량화된 지표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살림로직은 머니로직의 자본을 유인하여 스스로를 확장하는 문명적 가교를 갖게 된다.

인증 시스템: 상호 성장과 품질 보증의 기제

ESGG 인증은 상위 기관이 하위 단위를 검열하는 위계적 통제 장치가 아니라, 살림셀의 성숙도를 돕는 성장 가이드이다. 인증 단계에 따라 구성원들의 역할과 살림셀의 위상이 새롭게 정의된다.

역할의 전문화: 인증 과정을 통해 단순 실천자인 살리머(Salimer)는 가치 전문가인 살림 큐레이터(Salim Curator)로, 나아가 가장 높은 명예를 지닌 살림 트로피스트(Salim Trophist)로 성장하며 공동체의 리더십을 형성한다.

품질의 표준화: 제로 베이직의 에너지 자립률, 어반 베이직의 디지털 연결성, 컬처 베이직의 공동체 결속력을 지표화하여 살림셀의 생존 안전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보증한다. 이는 살림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문명적 기준이 된다.

가치의 번역과 가격 발견: 살림트로피는 살림로직에 의해 창출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머니로직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종의 가치 교환권이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정량화하지 못했던 공동체의 윤리적 기여와 회복탄력성을 가격 발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 이를 위해 살림DAO펀드와 같은 다수가 참여하는 펀드를 활용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수평적 거버넌스: 네트워크형 생존 연대

ESGG는 살림셀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거버넌스 장치이다. 이는 중앙 집중식 통제가 불가능한 다중위기 시대에 가장 강력한 회복탄력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완성의 원칙 실현: 살림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셀 내부의 자율에 맡기고, 셀 간의 협력이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만 ESGG 지표를 바탕으로 보완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하위 단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글로벌 분산 안전망: ESGG 인증을 받은 살림셀들은 하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기능한다. 특정 지역에 위기가 닥치면 다른 살림셀들이 살림트로피를 매개로 자원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분산형 생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형식화의 위험과 질적 평가의 병행

ESGG 성과가 단순한 서류상의 수치로 전락하여 머니로직의 성과주의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치에만 매몰되면 살림로직의 본질인 윤리와 공존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적 지표의 도입: 수치가 아닌 공동체 내부의 신뢰도와 삶의 질(풍요)이 실제 인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살림 큐레이터들의 현장 실사와 살림셀 간의 상호 교차 평가 제도, 살림DAO펀드의 Price Discovery 등을 통해 숫자가 놓치는 생명의 온기를 포착해야 한다.

윤리적 책임성 강화: ESGG는 단순한 등급 매기기가 아니라 우리와 지구를 구한다는 행성적 사회계약의 실천이다. 따라서 인증 과정 자체가 구성원들에게 청지기적 책임을 상기시키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9.4 제도적 확장과 공공 역할의 재정의

살림셀의 확산은 기존 국가와 제도의 해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 보고서는 국가의 역할을 '직접 관리자'에서 자율적 생존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만드는 '플랫폼 제공자'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1) 보완성의 원칙(Subsidiarity)에 기반한 역할 분담 이러한 재정의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인 '보완성의 원칙'을 현대 국가 전략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하위 공동체(살림셀)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최대한 자율에 맡기고, 상위 공동체(국가)는 하위 단위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지원할 때 사회 전체가 가장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원리다.

- **살림셀 (현장 중심):**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식량 자립**과 **돌봄**은 살림셀이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사각지대를 없앤다.
- **국가 (거시 중심):** 국가는 살림셀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인프라, 국방, 외교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

2) 위기에 강한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의 살림셀 이러한 역할 분담은 국가에게 책임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국가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각 살림셀이 기초적인 생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재난 발생 시 국가는 행정 마비 없이 가장 위급한 곳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다. 즉, 생존력이 강화된 하부구조(살림셀)는 상부구조(국가)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안보 자산**'이 된다.

3) 지구적 거버넌스와 최소 안전판의 마련 이러한 분산 구조가 고립주의나 배제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지구 신탁 위원회:** 행성적 공유재를 관리하기 위한 수탁 구조로서, 기후·생태 문제를 국가 간 경쟁이 아닌 공동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한다.
- **보편적 기본소득(UBI):** 살림셀의 자율성이 취약계층 배제나 강제적 공동체화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작동하여, 살림셀이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이 되도록 보장한다.

4) 메인프레임에서 PC로의 전환: 도시 기능의 재편 이러한 전환은 **메인프레임(Mainframe)**만 존재하던 시절에 **PC(Personal Computer)**가 출현하여 인류의 컴퓨팅 파워를 급격히 확장했던 역사적 사례와 유사하다. PC가 등장했다고 메인프레임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살림셀(PC)의 등장이 도시(메인프레임)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시는 배후 지원 역할을 하는 고성능 메인프레임으로 기능하고, 개별 살림셀은 분산된 생존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 도시의 문제를 보완하고 문명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9.5 살림셀 법제화를 위한 5대 입법 과제

살림셀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개정과 신규 입법이 필수적이다.

살림셀 특별법 제정

- 정식 명칭: 「살림셀 기반 분산형 생존주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 핵심 내용: 살림셀의 법적 지위, 토지, 건축 규제 특례, 예산 지원 근거 명시

에너지법 개정

- 현행 「전기사업법」상 자가발전 전력의 역송전 제한 조항 삭제
- 살림셀 내 분산발전 설비를 '공익형 마이크로그리드'로 분류하여 인센티브 부여

건축법 특례 조항 신설

- 제로 베이직 시설(태양광, 빗물 저장조 등)을 건폐율,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 컬처 베이직 공간(공유 거실, 돌봄 공간)을 필수 설치 시설로 규정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 공식 인증 체계 구축

- 「탄소중립기본법」에 MCI를 소규모 감축 사업 인증 제도로 명시
- MCC(조각탄소크레딧)를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

살림DAO펀드의 법적 지위 확립

- 「자본시장법」상 '사회가치 특별목적 투자기구' 신설
- 살림트로피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대상 자산으로 허용

이 5대 입법이 조기에 완료되어야, 살림셀은 실험에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다.

전환의 기술: 예방적 복지로서의 재정 효율성

정부와 지자체가 살림셀 확산을 지원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념'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Fiscal Efficiency)'에 있다.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예산 전환 기후 재난 피해 복구, 고독사 처리, 노인 요양 등 사후적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감안할 때, 살림셀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살림셀이 자체적으로 에너지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Self-care), 국가가 짊어져야 할 복지 및 재난 대응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국가는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을 국방, 외교, 거대 인프라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Pilot to Policy) 전면적인 제도 변화에 앞서, 특정 지역을 '살림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여 살림셀 모델을 실증한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건축법, 전기사업법, 의료법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살림로직이 실제로 작동하여 탄소 배출과 범죄율을 낮추고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 성공 데이터야말로 머니로직에 익숙한 관료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살림바(Salim Bar)의 투명성: '무임승차' 방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공동체 와해를 막기 위해, 살림바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여와 보상을 투명하게 기록한다. 이는 '말 뿐인 봉사'나 '무임승차(Free-riding)'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며, 공동체의 신뢰 비용을 기술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10장. 전환 이후의 효과와 잠재적 한계

본 장에서는 살림셀과 살림로직이 일정 수준 이상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구조적 효과와 동시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살림셀을 이상적 모델로 미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존주권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들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10.1 전환 이후의 기대 효과

생존권의 실질화: 권리에서 역량으로의 전환 살림셀의 확산은 생존권을 선언적, 법적 권리의 차원에서, 실질적 생존 역량(capability) 차원으로 전환시킨다. 반면 살림셀은 개인과 공동체가 에너지, 식량, 돌봄, 관계의 최소 조건을 직접 구성함으로써, 생존을 외부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만든다.

이는 생존을 '청구해야 할 권리'에서 '이미 작동하는 조건'으로 변화시키며, 위기 상황에서 생존권이 공백 상태로 전락하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한다. 그 결과, 지방 소멸을 멈추고 출산율이 반등하며 국가 소멸 시계를 늦춘다.

국가 위기 대응 구조의 전환과 회복탄력성 강화 분산된 살림셀은 중앙집중적 국가 대응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분산형 회복 인프라로 기능한다. 기후 재난, 팬데믹, 에너지 위기와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가 단일 시스템은 병목과 과부하에 취약하지만, 살림셀은 지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는 국가의 위기 대응 부담을 구조적으로 분산시켜 전체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사후적 복구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 안정성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노동 개념의 재정의와 삶의 재구성 살림셀의 확산은 '돈 버는 노동(Earning)'에서 '가치 짓는 노동(Deep Job)'으로의 문명적 전환을 완성한다. 식량 생산, 돌봄, 생태 복원 등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활동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실현하는 고귀한 과업으로 재평가 받으며,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일이 넘쳐나는 사회'로 나아간다. "이는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살림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가 일'이라는 인식 전환을 가능하게 하며,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경로를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반 강화 살림셀은 시민을 복지의 수혜자나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공동 설계자**로 전환시킨다. 이는 참여가 선거나 여론 표출에 한정되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적 생존 조건을 함께 관리하는 생활 민주주의의 토대를 제공한다.

공동체 차원에서의 책임과 참여가 축적될수록, 민주주의는 추상적 제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내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기후 대응의 실행 단위 확보 기존 기후 정책은 국가 단위의 목표 설정과 국제 협약에 집중되어 왔으나, 실제 감축과 회복의 실행 단위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살림셀은 기후 대응을 측정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최소의 실행 단위로부터 실행이 이루어져 확대되는 구조로 전환한다.

에너지 자립, 소비 감소, 순환 구조 구축은 살림셀 내부에서 실증되며, ESGG 프레임워크를 통해 상위 정책, 국제 협력과 연결된다. 이는 기후 대응을 선언에서 실행으로 이동시키는 구조적 전환이다.

10.2 구조적 우려와 대응 과제

한편, 살림셀과 살림로직의 확산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우려를 동반할 수 있다.

공동체의 폐쇄성과 배타성 위험 살림셀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공동체 간 단절이나 새로운 형태의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살림셀의 개방성과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기준, 즉 ESGG를 통한 외부 연결 의무가 병행되어야 한다.

역할 분담의 명확화와 협치 살림셀은 국가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층위를 나누는 것이다. 국가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제도를 깔고, 살림셀은 '현장 실행자'로서 삶을 돌본다.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보완성의 원칙'처럼, 하부 단위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위임하고 국가는 더 큰 위기에 집중하는 가장 선진적인 협치 모델이다.

살림셀 간 격차의 재생산 지역별 자원, 기술 접근성, 초기 역량의 차이는 살림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낳을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 투자, 초기 표준 모델 제공, 취약 지역 우선 지원과 같은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ESGG 성과의 형식화와 수치 경쟁 위험 ESGG 지표가 지나치게 계량화 될 경우, 살림의 질적 가치가 수치 경쟁으로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량 지표와 함께 서사 기반 평가, 질적 검증, 시민 참여형 평가 구조를 병행해야 한다.

살림셀의 대중화: 벙커(Bunker)와 게토(Ghetto)를 넘어서 살림셀이 부유층만의 '럭셔리 벙커'가 되거나, 반대로 빈곤층이 밀려난 '현대판 게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공공의 개입과 단계적 전환 모델이 필수적이다.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 (Public Infrastructure Model) 살림셀의 초기 구축 비용(CAPEX)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로와 수도를 국가가 깔아주듯, 제로 베이직(에너지, 물 자립 설비)과 어반 베이직(디지털 인프라)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간접 자본(SOC)' 예산으로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대신 입주자는 운영 비용(OPEX)과 공동체 활동(Culture Basic)을 책임지는 구조(PPCP: Public-Private-Community Partnership)를 통해, 경제적 약자도 살림셀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야 한다.

기존 도시의 '살림 리모델링' (Retrofitting) 살림셀은 신규 단지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의 아파트 단지나 노후 주택가도 에너지 자립 설비를 설치하고, 공동 돌봄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살림셀'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이주 없이도 살림로직을 확산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도시 재생(Retrofit)' 전략이다.

개방형 연결 의무화 (Open Connectivity) 살림셀이 고립된 섬이 되지 않도록, ESGG 인증 평가 항목에 '지역 사회 기여도'와 '외부 연결성'을 핵심 지표로 포함한다. 살림셀 내부의 자원과 서비스가 외부 이웃과 공유될 때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함으로써, 폐쇄적 이기주의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한다.

10.3 만약 살림셀이 실패한다면: 대안 없는 미래의 비용

살림셀은 완결된 해법이 아니라, 다중위기 시대에 생존을 다시 인간과 공동체의 손으로 되돌리기 위한 문명적 실험이다. 이는 기존 질서를 단번에 대체하는 혁명적 모델이 아니라, 국가, 시장,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며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전환 경로에 가깝다.

따라서 이 전환의 성패는 제도의 정교함이나 기술의 완성도보다, 어떤 인간이 이 구조를 책임지고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간이 생존을 경쟁이 아닌 살림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살림셀은 구조이자 질문이며, 그 답은 실천을 통해 축적될 수밖에 없다.

살림셀이 확산되지 못하고 기존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한국 사회는 다음의 시나리오에 직면한다.

시나리오 1: 기후 난민의 국내 발생

- 2035 년, 해안가 저지대 100 만 명이 집단 이주
- 국가 재난 복구 비용: 연간 50 조 원 이상 소요 (GDP 의 2.5%)

시나리오 2: 전력망 블랙아웃과 경제 마비

-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감당 못 한 중앙 전력망 붕괴
- 산업 생산 중단, 금융 시스템 마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일주일에 100 조 원

시나리오 3: 사회적 붕괴(Social Collapse)

- 생존 불가능 지역 주민의 도시 유입 → 주거, 일자리, 복지 시스템 과부하

- 2025 년에 18 개국에서 사회 대혼란이 발생했고, 3 개국은 정권이 교체됨,
이러한 사회 대혼란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단순히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공포 앞에서 이웃이 이웃을 약탈하고, 혐오가 일상이 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회귀하는 것, 즉 **인간성의 파산이야 말로 우리가 치러야 할 가장 비싼 대가다.**

주요 경제 연구기관의 사회갈등 비용 추산(연간 최대 246 조 원)과 기후 피해 모델링을 종합할 때, 우리가 직면할 시나리오의 사회적 총비용은 **연간 200 조 원**을 쉽게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살림셀 확산의 10 년 총투자액은 50 조 원**에 불과하다.

전환은 비용이 아니라, 파국을 회피하는 가장 저렴한 보험이다.

11장. SDX재단의 핵심 사업 3축과 실행 구조

실행형 플랫폼 조직으로의 전환

SDX재단은 다중위기(Polycrisis) 시대의 생존주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담론 제시를 넘어 현장 실증-기술 생태계-인재 및 담론 확산으로 이어지는 세 개의 핵심 사업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이 세 축은 상호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 전략을 구성하는 유기적 구조로 설계된다.

SDX재단은 살림셀의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아니라, 표준·인증·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자본과 정책이 살림셀로 유입되도록 연결하는 플랫폼 주도 기관이다. 살림셀의 성과를 MCI 기준에 따라 평가·인증하고, 이를 MCC로 전환함으로써 기후테크 기업, 지자체, 시민의 자발적 기여가 시장과 제도로 연결되는 **'신뢰의 연결고리(Trust Link)'** 역할에 집중한다.

[제1축] 살림셀(Salim Cell) 사업: 기준과 신뢰의 거버넌스

살림셀 사업은 지역과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대학, 산업단지, 민간 조직 등 다양한 파트너에 의해 수행된다. SDX재단은 살림셀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살림셀이 성립되고 확산될 수 있는 기준과 신뢰 구조를 설계·운영하는 거버넌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평가 및 인증 체계:** 살림셀의 기본 요건과 단계별 기준을 정의하고, Zero Basic, Urban Basic, Culture Basic에 대한 세부 평가·인증 체계를 운영한다.

- **신뢰 데이터 플랫폼:** 살림셀의 생존, 탄소, 공동체 성과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공통 프레임과 데이터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투자, 기후재원이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살림셀로 유입되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살림셀의 성과에 대한 신뢰와 자금 흐름은 중앙에서 관리되는 개방형 생태계 모델이 형성되며, 이는 생존주권을 추상적 개념이 아닌 현실의 삶의 단위로 구현하는 핵심 사업이다.

[제2축] MCI 기반 기후테크 생태계 구축 사업: 가치의 정량화와 보상

살림셀 실증을 통해 발생하는 탄소 감축 성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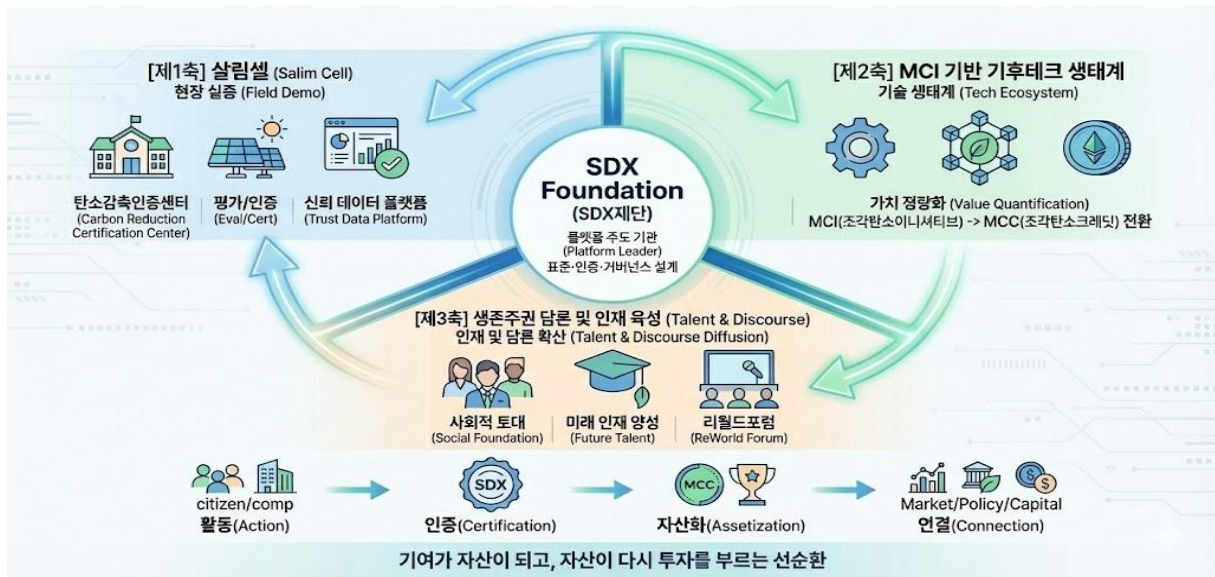
- **인증·표준·거버넌스 제공:** SDX재단은 조각탄소이니셔티브(MCI)를 통해 기후테크의 감축 성과를 **SDX탄소감축인증센터**를 통해 인증하고, 그 결과로 발행되는 조각탄소크레딧(MCC)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공자로서 기능한다.
- **선순환 생태계 형성:** 이를 통해 ‘기후테크 → 탄소 감축 → MCC 발행 → 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살림셀 확산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3축] 생존주권 담론 확산 및 인재 육성 사업: 사회적 토대 형성

구조적 전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토대를 형성한다.

- **미래 인재 양성:** SDX재단은 살림셀과 MCI 생태계를 현장에서 이끌 핵심 주체로서 **탄소감축평가관리사, 살림 큐레이터 및 SERA형 인재**를 정의하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포럼, 출판 사업을 전개한다.
- **담론의 확산:** **ReWorld Forum**을 중심으로 국내외 포럼, 정책 대화, 교육 프로그램, 연구·출판 활동은 생존주권을 새로운 사회적 상식이자 정책 언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3축 사업 구조를 통해 SDX재단은 단순한 문제 제기 기관을 넘어, 생존주권 전환을 실제로 설계, 검증, 확산하는 실행형 플랫폼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SDX 재단
SDX FOUNDATION

결론: 생존주권을 통한 새로운 사회계약

2026 년 이후: 점진적 개선이 아닌 구조적 전환의 시기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생존주권의 재설계는 선언적 가치의 제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생존을 국가와 시장, 기술에 전적으로 위임해 온 기존 구조를 수정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의 작동 단위를 재배치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생존주권은 권리의 확장이 아니라, 생존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반을 재설계하는 문제이며, 살림셀은 그 재설계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최소 실행 단위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단순히 위기를 피하는 생존 기술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더 많은 소유를 위해 파괴하던 '양적 성장(Growth)'의 시대를 끝내고, 서로의 지혜와 돌봄을 나누며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질적 성숙(Maturity)'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살림셀 안에서 피어나는 '딥잡(Deep Job)'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성숙재들은, 인류가 머니로직의 결핍에서 벗어나 윤리적 풍요라는 진정한 업사이드(Upside)를 누릴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결국 살림셀은 위기에 처한 인류가 '생존'을 넘어 '성숙'한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자, 새로운 사회계약의 실체적 증거가 될 것이다.

2026 년은 실험의 해가 아니라, 전환을 공식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원년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간의 생존주권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의 중대한 변곡점을 거쳐 형성되어 왔다. 고전적 주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기반으로 한 복종의 계약이었으며, 근대의 생명정치는 인구를 관리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조직했다. 이후 복지국가 체제에서 생존은 제도적 권리로 확장되었으나, 오늘날 인류는 기후위기와 기술적 디스토피아라는 이중의 위협 속에서, 생존 자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머니로직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기존의 생존권은 법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능력과 시스템 접근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작동하는 불안정한 권리로 전락하고 있다. 국가는 기후위기와 행성적 공유재의 관리, 기술 전환이 초래하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단독으로 감당하기에 한계에 도달했으며, 개인은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기에는 지나치게 취약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존주권(Survival Sovereign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생존권이 생존을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 수동적 권리로 이해하는 기존 관점을 넘어, 생존주권은 개인과 공동체가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스스로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으로 생존을 재정의한다. 이는 생존을 통제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조건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생존주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최소 단위로서 **살림셀**을 제안하였다. 살림셀은 에너지, 식량, 돌봄, 관계의 기본 조건을 자율적으로 확보하는 최소 공동체로서,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국가, 시장, 기술이 감당하지 못하는 생존의 공백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본 단위이다. 살림셀은 위기 상황에서는 분산형 생존 안전망으로 작동하며, 평시에는 서로 연결되고 확산 가능한 생존 네트워크의 기반이 된다.

이 전환에서 국가는 생존을 직접 제공하는 보호자 모델에서 벗어나, 생존주권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국가는 살림셀 간의 연계를 지원하고, 기본 인프라와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며, 생존주권의 지역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국가 책임의 후퇴가 아니라, 위기 시대에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존 책임을 재구성하는 전환이다.

살림셀의 확산은 인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본 보고서는 살림셀을 이끄는 주체로서 인간을 단순한 노동자나 소비자가 아닌, 생태계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는 **청지기(steward)**로 재정의하였다.

이러한 인간상은 **SERA**(Story, Empathy, Resilience, Achievement)라는 핵심 역량을 통해 구체화되며,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권력은 지배와 통제의 권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살림 권력(Salim Power)이다.

이제 미래의 생존주권은 “나를 적대적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라”는 배타적 안보 논리를 넘어, “**우리와 지구를 파국으로부터 구하라**”는 새로운 **행성적 사회계약(Planetary Social Contract)**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배, 성장, 경쟁을 핵심으로 해온 머니로직에서 벗어나, 다음의 세 가지 살림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활 자립성**(Life Autonomy)이다. 이는 생존을 시장 가치나 노동 능력으로 평가해 온 기존 질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의미한다. 살림로직의 경제 체제는 생존을 존재 자체로 보장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으며, 개인과 공동체가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생활 자립성은 생존의 탈상품화를 통해 삶의 본질을 복원하는 원칙이다.

둘째, **지구적 공생성**(Planetary Coexistence)이다. 이는 인간의 생존이 지구 시스템의 안정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연을 무한한 자원이나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해 온 기존 관점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행성적 연대성**(Planetary Solidarity)이다. 기후, 데이터, 생태계의 흐름은 더 이상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서 통제될 수 없다. 미래의 생존주권은 국경을 초월한 생태적, 기술적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기후, 생태, 데이터 흐름을 공동으로 조율하고 책임지는 행성적 거버넌스 체계를 요구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서로 분리된 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는 상호 보완적 요소이다. 생활 자립성은 생존의 물적, 사회적 토대를 제공하고, 전지구적 공생성은 문명 전환의 윤리적 기준을 형성하며, 행성적 연대성은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원칙 위에서만 생존주권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죽게 내버려두는 '면역의 정치'를 넘어, 살림셀과 같은 자율적 공동체를 통해 취약한 존재들과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돌봄과 공존의 정치로 전환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살림로직의 세 가지 원칙은 문명 전환이 지향해야 할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책, 제도, 투자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실행 프레임이 필요하다.

ESGG(Ethical Sustainable Global Good)는 살림로직의 세 원칙을 측정 가능하고 확산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운영 프레임이다. 생활 자립성은 생존을 시장 가치가 아닌 윤리적 책임으로 재정의한다는 점에서 Ethical 차원과 연결되며, 전지구적 공생성은 순환과 회복을 전제로 한 Sustainable 차원과 맞닿아 있다. 또한 행성적 연대성은 개별 공동체의 실천을 전 지구적 선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Global Good의 영역으로 귀결된다.

ESGG는 이를 지향하는 하나의 운영프레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살림의 윤리를 담은 생태적 책임(Ethical),
순환과 공존의 에코로직을 구현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le),
그리고 이를 전 지구적 차원(Global)에서 실천하여 공동의 선(Good)을 창출하는 것,

우리가 구축하는 살림셀은 행성적 공유재를 관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청지기 구조이자, 생존주권이 실제로 작동하는 최소 실행 단위다. 살림셀의 확산은 위기 속에서 문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이 아니라,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전환 전략이다. 지금 이 전환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생존은 다시 국가, 시장, 알고리즘에 의해 선별되는 영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당장의 실천과제를 제안하면,

2026 대전환을 위한 3대 실행 과제 (Action Plan)

"2026년,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머니로직의 폭주 기관차에 앉아 파국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살림셀이라는 구명정에 올라 새로운 문명으로 향해갈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다. 스스로의 달란트로 이웃을 살리고 지구를 돌보겠다는 '청지기(Steward)'의 결단이다. 살림셀은 그 결단이 머무는 집이며, 생존주권은 그들이 써 내려갈 새로운 희망의 헌법이다. 대전환은 시작되었다.

생존주권의 회복과 살림셀의 확산은 당위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26년부터는 다음의 3대 요소를 기반으로 '실체적 전환'을 강제해 나가야 한다.

예산의 구조적 전환: '살림 주권 펀드(Salim Sovereignty Fund)' 조성 기존의 1년 단위 성과 중심 예산으로는 10년, 20년을 내다봐야 하는 공동체 기반 생존 실험을 지속할 수 없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예산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 **살림 전환 금융(Transition Finance):** 정부의 공적 자금(Risk-taking)과 민간의 ESG 자본, 그리고 시민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결합한 혼합 금융(Blended Finance)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 **지역 소멸 대응 예산의 전용:** 도로와 건물을 짓는 데 매몰된 연간 수조 원의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살림셀 초기 인프라(Zero/Urban/Culture Basic) 구축 자금으로 과감히 전용해야 한다.

전문 인력 양성: '살림 큐레이터' 10만 양성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환경 운동가나 공학자만의 영역이 아니다. 기술(Tech), 금융(Finance), 공동체(Community)를 연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직군이 필요하다.

- **융합형 설계자 육성:** 살림셀의 에너지 자립을 설계하고, MCI로 탄소를 측정하며, 살림바(Bar)를 통해 공동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살림 아키텍트'를 국가 공인 자격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 **공무원 조직의 재정:** 관리와 통제에 익숙한 행정 공무원들을 '지원과 연결'을 담당하는 살림큐레이터로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즉각 가동되어야 한다.

사회적 각성: '국가 생존 회의(National Survival Assembly)' 소집 생존주권은 국가가 시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다. 시민 스스로가 "머니로직 사회는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시민 공론화장 마련:** 소수의 엘리트나 정치인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별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생존주권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설적인 '시민회의'를 제안한다.
- **SDX 재단의 역할:** 이러한 사회적 각성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자, 흩어진 살림셀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써 중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다중위기 시대에, 생존을 넘어 생존주권으로 한단계 진화하는 과정은 인류의 구조적 요청이다.

살림셀은 그 요청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 응답이며, **생존주권은 이를 관통하는 핵심 권리이자 의무다**. 이러한 전환이 축적될 때, 인간은 비로소 지구 생태계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역할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관련문의: ceo@sdxfoundation.org 또는 hajin@hajin.com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References)

1. 고전적 주권 및 생명정치 이론

- Hobbes, Thomas. Leviathan. (1651).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Pantheon, 1978. /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5-1976.
-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2. 헌법 및 생존권의 역사

- Weimar Constitution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Article 151. (1919).
- Roosevelt, Franklin D. "State of the Union Address (The Second Bill of Rights)". (1944).
- UN General Assembl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3. 현대의 위기와 죽음정치 (Necropolitics & Climate Crisis)

- Mbembe, Achille. "Necropolitics". Public Culture, 15(1), 2003.
- Petryna, Adriana. Life Exposed: Biological Citizens after Chernobyl.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 Alston, Philip.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Digital Welfare State)". United Nations, 2019.
- District Court of The Hague. SyRI Judgment (System Risk Indication). C/09/550982 / HA ZA 18-541, 2020.
- Wainwright, Joel, and Mann, Geoff. Climate Leviathan: A Political Theory of Our Planetary Future. Verso Books, 2018.

4. 미래 대안 및 살림셀 (Salim Cell) / 살림로직

- 전하진. "[논현논단] 벤처 30 년, 미래 30 년은 '살림셀'이다". 이투데이, 2025.12.16.
- 전하진. "살아내는 삶 vs 살리는 삶". Brunch Story.
- 전하진. "[논현논단] 살림자본주의". 이투데이.
- 전하진. "머니로직을 넘어 살림로직으로: 문명 전환의 설계도". SDX 재단 내부 보고서, 2025.
- 에스라이프재단.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주거환경 SiTi (Smart, Small, Sustainable, Self-sufficient)". 한국경제, 2017.08.15.
- "살림마을: 기술과 공동체의 융합형 정주 모델". NetZeroNews.

- Haraway, Donna J.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ke University Press, 2016.
- Rockström, J. et al. "The Planetary Commons: A New Paradigm for Safeguarding Earth-Regulating Systems in the Anthropocene". *PNAS*, 2024.
- Bosselmann, Klaus. "Earth Trusteeship Initiative". Earth Charter International.
- Standing, Guy.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Pelican, 2017.
- 금민, 백승호. "기본소득은 권리인가: 한국 헌법학 및 사회복지학적 논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



살림셀(Salim Cell) 기본 규격 (예시)

다중위기 시대의 최소 생존 인프라 표준 (Reference Spec v1.0)

살림셀은 기후·에너지·일자리·기술 위기가 중첩되는 다중위기 상황에서도, 개인과 공동체가 최소한의 생존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분산형 생존 인프라의 표준 단위다.

1. 기본 스케일 (Scale)

- 인구 규모: 20 ~ 150 명
- 가구 수: 10 ~ 50 가구
- 공간 조건: 기존 주거·유흥시설 활용
- 설계 원칙: 완전 자급 ❌ / 회복탄력성 기반 자립 ○

목표는 '이상적 자급'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도 붕괴되지 않는 생존 지속성이다.



ZERO BASIC 생존 자립	URBAN BASIC 기능 연결	CULTURE BASIC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 자립률: 연간 50~70%• 태양광 중심 분산발전 + ESS + 수요관리• 외부 공급 차단 시 3~7일 섬모드 유지• 식량: 칼로리 기준 20~40%• 식량 비축: 30~60일분• 물 절수재사용, 유기물 순환율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 인프라 이중화• 원격의료 및 응급 연계• 온라인 교육 접근• 디지털 행정 처리• 원격지역 기반 일거리 연계 <p>공간의 고립이 곧 생존의 고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돌봄 역할 분담• 소규모 합의 기반 운영• 비화폐 기여 기록 체계• 생존윤리 정기 학습• 고립 및 이탈 최소화 <p>살림셀의 지속성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연역체계에서 결정된다.</p>

2. 살림셀의 핵심 구조 (The 3 Basics)

3. 운영 및 정책 연계

- 운영 주체: 주민 + 공공 파트너
- 국가 역할: 통제 ❌ / 기반 제공 ○

- **재정 구조:** 기존 예산 전환
- **법적 위치:** 실증 특례 또는 공공-민간 중간 영역
- **확산 방식:** 비교·복제 가능한 표준 구조

4. 공통 성과 지표 (정량 평가)

- 에너지 자립률 (%)
- 식량 공급 충격 대응 일수
- 가구당 필수 생활비 절감률
- 외부 의존도 감소율
- 이탈률 / 정착률
- 탄소 감축량 (MCI 연계)

살림셀은 다중위기 시대에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 생존 인프라 단위'다.

